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사고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동승자의 사망률도 7배로 높입니다  
귀찮아서 불편해서 잘 매지 않으십니까  
뒷좌석 안전띠,  
더이상 혼자만의 안전띠가 아닙니다

안전이 첫 번째 길이다

 한국도로공사



# 함께 나누는 사랑, 더불어 사는 행복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합니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11월 4일 오후 대학로 갤러리카페 미나리하우스에서 총 3억원 규모의 후원협약을 체결한 뒤 축하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 이천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 대표, 이덕훈 수은 행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권우석 수은 인사경영지원단장.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1억원을 후원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이 100호 기업 가입을 맞이해 사회적기업연대공제회로 독립 발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체결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발족한 공제회의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과 별도로 대출심사 등 수은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보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연대공제회는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해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영세 사회적기업에게 긴급자금 대출과 상해공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함께 개별 기업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후원 협약식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다져서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면서 “수출입은행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후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운영자금 제공, 제품·용역 구매, 번역·회계·경영자문 등 꾸준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Healthy Future of Korea !

지난 50년간 (주)한국백신이 지켜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커버스토리  
서민주거안정 캠페인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소망캠페인을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시작된 주거 안정에의 열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5\_11, 12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49호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태룡 정책위원장 서순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김한기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남은경 윤철한 오세형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송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5년 10월 12일 발행

CCEJ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Jongn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 CONTENTS

## 동승동칼럼

08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은 개혁적인가? / 고계현

## 기획특집

- 11 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 윤은주
- 14 ②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역대 최악'으로 남아 / 김삼수
- 18 ③ 정부는 왜 '2분 진료'를 양산하나? / 남은경
- 21 ④ 도대체 내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 유애지

## 시사포커스

- 23 ①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 역행,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 남은경
- 26 ②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권오인
- 29 ③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 결과 / 윤은주
- 32 ④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시민이 뿔났다! / 정택수
- 35 ⑤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 박지호
- 38 ⑥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인가? / 최예지
- 41 ⑦ 또다시 특혜!! 시민보다 기업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 최승섭
- 44 ⑧ '무늬만 회사차'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 권태환
- 47 ⑨ G20과 UN : 변화하는 국제협력 / 이현아

## 통일마당

50 "아베정권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 홍명근

## 경실련 이야기

- 56 ① 경실련 경제민주화 특강 / 정택수
- 58 ②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 / 홍유현



11 기획특집1  
서민주거안정 캠페인



23 시사포커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 역행

## 경제브리프스

60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의 영향과 개선방안 / 임세은

## 지역이야기

- 63 ① 우수 지역경실련 수상 유감 / 조광현
- 66 ②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사업 / 좌광일
- 70 ③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 / 김동현

## 안녕하세요? 회원님!

72 [인터뷰] 지선미 회원  
"20대가 느끼는 삶의 단상은..." / 오세형

## 문화산책

74 클래식 전문점, 풍월당에 가 / 정유림

## 동승동 책방골목

- 76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장 피에르 카르티에, 조화로운삶 / 이수련
- 77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이나요? <긍정의 배신> 바버라 애런라이크 저, 전미영 역, 부키 / 김용석

## 편집자에게

78 2015년을 보내며 / 오세형

## 회원게시판

79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경실련 일일보고

80 경실련 일일보고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3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8 경실련 이야기2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



63 지역이야기1  
우수 지역경실련 수상 유감



##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은 개혁적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새누리당의 5대 노동개혁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듯이 말하며 그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5대 노동개혁안이라 함은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노동시장에 관계된 대다수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가계수입이 줄고 이로 인해 내수가 줄어 일부 수출대기업 외에 성장여력을 상실한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근 현실이다. 따라서 과연 이 노동개혁안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활력의 계기를 마련할지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마치 날치기라도 할 듯이 이들 법안의 처리만을 강조할 뿐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미 진행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마저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을 기망하여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일반해고의 허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본인 의사에 따라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 금지의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인 뿌리기술 분야까지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임금단기계약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축소여부, 특별연장근로 등 법정 근로시간 정상화 여부 등 많은 쟁점 등을 안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시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져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 완화를 위해서 정규직전환을 유인하거나, 동일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뿌리기술 분야 파견근로 허용도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 근로를 확대시키는 것이기에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뜰이나 어려운 제조업 현실에 기초기술의 축적마저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된다.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전반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다.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력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키며 제조업 전반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의 명퇴와 정리해고 외에 일반해고의 허용까지 가능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노동개혁안은 비정규직 촉진 안이고 해고 촉진 안에 불과하다. 즉 노동개혁안이 아니라 노동 악화안에 다름 아니다. 노동개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처사이다.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결코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보다는 정반

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여당 안이 제도로서 현실화 되면 현재도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인해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이 증가되고 가계소득은 더욱 악화되어 가계 소비지출의 증가는 더욱 더딜 것이다. 이로 인해 내수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기업도 어려워져 국내 경기 활성화는 요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수출 대기업들만 계속 배부르게 될 것이다.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이 높아진다 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전이되는 낙수효과는 사라진지 오래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 높아진다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신화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결국 정부여당 안은 경제 활성화에 상관없이 다수 근로자들의 고통으로 대기업만을 배부리는 안에 불과하다.

지금 일본과 미국, 유럽 등 각 나라의 경제정책은 개인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이전처럼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평등, 개인과 가계의 소득 불평등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살려낼 수 없을 뿐더러 더 어렵게 한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박근혜 정부는 일반 국민과 가계가 아니라 기업 그것도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매몰되고 있다. 정부여당처럼 해서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은 몇 번이고 고통을 감내하고 이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 시기에 늘 해왔던 것처럼 규제완화, 부동산 부양, 고용유연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악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데 그 비극이 있다.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여당의 노동 개정안은 개혁안이 아니다.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며, 고질적인 근로문화 개선을 유예하는 등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정안을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한다면 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시간을 갖고 모두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윤은주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 간사  
dongi78@ccej.or.kr



▲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가계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경실련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두 주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망 캠페인을 벌였다. 거리캠페인과 1인 시위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경실련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국회 앞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망 캠페인 대단원의 막을 열었다. 전셋값 폭등과 가계부채로 힘든 우리나라 한 가구를 상징하는 텐트에 불이 붙어서 시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땀질식 부양책으로 더 부채질해서 불을 붙이

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시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을 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거품제거' 소화기가 불을 꺼주는 장면을 연출하며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다.

거리캠페인은 20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등에서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주거불안의 심각성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망메시지에 참여하도록 홍보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소망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를 외치며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많은 시민이 "진짜 집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사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며 참여했다. 그 밖에도 시민이 써주신 소망메시지에는 "제발 전셋값, 집값 좀 내려주세요", "한 곳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빚 없는 세상에서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전세대란을 국가에서 잡아주세요" 등의 바람이 담겼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노근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와 최창희 회원이 시위에 참여했다. 안산 전해철 의원실 앞에서도 셋째 날부터 시위를 진행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힘내라고 음료수를 주고 가기도 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덕분에 날은 추웠지만, 훈훈하게 1인 시위까지 예정된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소망캠페인 일정은 끝났지만, 경실련은 서민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논의가 담보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및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경실련은 12월 활동 종료를 앞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 경실련은 10월 셋째주에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등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망메시지' 보내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주간 거리캠페인의 뜨거운 열기를 몰아 소망캠페인 두 번째 주에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경실련이 함께해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첫날, 서울은 국회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강행한 1인 시위 덕분에 그동안 8차례 회의에서 두 번만 출석하고 회의 참석시간도 너무 짧아 특위에서 존재감이 없던 충북 박덕흠 의원이 당일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와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고 질의도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1인 시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1인시위'는 중앙경실련과 대구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안산경실련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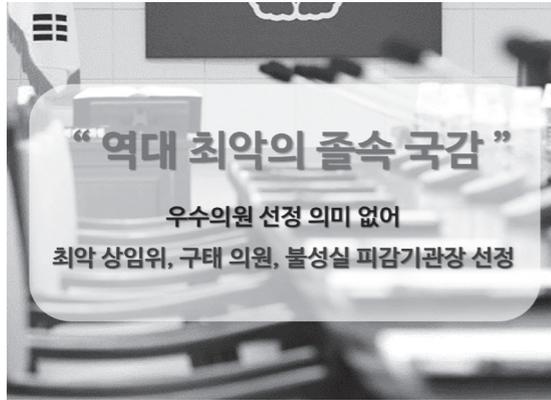
▲ 경실련은 10월 마지막주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2일 차부터는 서울도 김성태, 강석훈, 이노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날씨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더 시급하게 느껴졌다. 김성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의원 사무실 직원들이 나와서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피켓 문구가 너무 과하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실랑이가 있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지역구 사무실에서

#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역대 최악'으로 남아

정책실종·민생외면...총선 앞두고 잣밥에만 관심 뒤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 우수의원 선정 의미 없는 최악의 국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사상 최다 피감기관(779개)을 대상으로 의욕을 불태웠다. 하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로 남게 됐다. 19대 국회는 출범 이후 매년 여야간 정쟁,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감 파행운영과 '부실·맹탕 국감'을 되풀이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초반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출석 문제로 정무위가 파행됐고, 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로 행정자치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률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2015년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로 나누어 진행됐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기대가 컸다. 19대 국회는 유종의미를 거두었을까? 경실련은 2000년부터 진행해 온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올해 역시 실시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평가해 본다.

이번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도 여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감이다 보니 의원들은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방안에만 몰두했다. 이

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두드러지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만을 되풀이했다. 소모적 정쟁과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감 최대이슈였던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물론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 정책질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구태와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야 초선의원들의 반성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법사위·정무위·보건복지위 '최악 상임위' '구태 의원 8인'·불성실 피감기관장 6인 선정

역대 최악의 국감에는 '최악의 상임위'도 존재한다.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보다는 지역구 현안을 챙기거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서고, 화제



▲ 국감현장 출처 : pd채널2

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인 의원들도 많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일 축구시 누구를 응원하냐"고 묻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보여주기식 무리한 권총 시연을 요구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다며 바지를 내려보라고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구태 의원'의 행태를 보였다.

내년 총선 출마지역의 지역민원을 챙기며 국감장을 유세장으로 만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장관에서 용인을 통과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라고 요구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 역시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요구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한 이찬



▲ 썰렁한 국감현장 출처 : 포커스뉴스

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갑),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 등 지역구 민원처리에 급급한 의원들도 여전히 '구태'를 드러냈다.

비생산적 부실 국감을 부추기고 국감을 방해한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였다.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많았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국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감기관장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 시급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정감사의 한계는 여전하다.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다였다.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된 국감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52

개(상임위 평균 5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45개 소관기관에 대해 국감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한 감사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첫째,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켈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해야 한다.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

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사후조치 이행여부의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한 해 동안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다.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 정부는 왜 '2분 진료'를 양산하나?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nari@ccej.or.kr

복지부는 지난 11월 5일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 1인당 진료 소요시간이 6분 미만일 경우(의사 1인 기준 환자 75인 이상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차감해서 지급했다.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고 병원의 진료를 도폐기<sup>1)</sup>로 만드는 정책을 정부는 왜, 누구를 위해 추진하나?

차등수가제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의 반대로 부결됐다.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3개월 만에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상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

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이익단체(의사협회)만을 위한 이번 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1) 차등수가제 유지의 필요성

■ **의료기관 비용인식 강화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및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으로,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는 급여행위(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가격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급여행위 가격은 적합성을 담보할 만한 타당한 근거(예, 의사의 업무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행위(예, 2015년 기준 의료행위는 약 8천여 개)각각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다. 공급자(의료기관)들은 의료의 질적 측면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해 환자수 및 진찰횟수 등 진료량을 증가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원가 마진이 높은 의료행위의 진료량을 늘리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건정심 안건 비교표〉

구분	내용(6월 29일)	내용(10월 2일)
공제한도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의원
대안	대상 기관 환자당 진료시간 공개	대상 기관(의원) 대안 없음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병원급 진료시간 공개 (* ** 의원과 무관)
공제율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사전 심의	행전위 사전 심의 없음

〈차등수가제 폐지(안) 쟁점별 가입자〉

구분	6월 29일	10월 2일
내용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의원만 폐지
가입자 입자	※ 차등수가제의 주요 대상이 의원임을 감안하면 약국, 치과,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내용상 차이가 없음. 약국은 이미 폐지 제외 대상으로 논의되었음. ※ 즉, 6월의 안건은 차등수가 폐지 여부이고, 10월의 안건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만 바꾼 것임.	
대안	진료시간 공개	병원급 진료시간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도입
가입자 입장	※ 제도 폐지의 대상과 대응 방안의 대상이 다름. 즉 차등수가가 폐지되는 의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없음. 병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의원의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이 될 수 없음.	
절차	행전위 사전 심의	행전위 사전 심의 없음
가입자 입장	※ 복지부 주장대로 상정된 안건이 다르다면 행전위 논의를 거쳐야 함. 행전위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음.	

등 과잉진료에 대한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 보상은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비용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공급자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진찰횟수를 늘리는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안 마련없이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다.

## (2)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과정의 문제

### ■ 의원급 폐지에 대한 대안 부재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논의 시에는 대안으로 폐지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공개가 제시됐다. 그러나 10월에는 폐지 적용대상인 의원의 의료 질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병원급의 진료시간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폐지 대상 기관과 대안(사후관리)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의원의 차등수가제

1) 물건을 합쳐 흥정하거나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죽씩 팔아넘기는 것 '도매로 떼는 것'이라는 뜻의 말로 보면 된다. 네이버 사전

폐지에 따른 적정한 대안이 아니다.

■ 절차의 적법성 문제

10월에 상정된 차등수가제 폐지안건은 6월 상정된 안건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복지부는 신규안건이라며 상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적용 대상이 약국, 치과, 한의원이 제외됐기 때문에 6월 상정안과 분명히 차이를 주장했으나,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이 대부분 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동일 안건이다. 통상 의결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재상정일 경우 사회 통념상 강화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나 신규 안건임을 강조하며 일반 의결정족수로 공개표결을 강행했다.

복지부 주장대로 10월에 상정된 안건이 '신규'라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 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이 없다.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수가 인하 결정 처분 고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동일한 사안이다.

(3)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최소 진료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나 조제에 투입하는 시간이 제한되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사고의 우려도 높다.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지 위해 최소한의 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이 심각

하므로 의원은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네의원은 2분 진료로도 충분하다는 의학 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저급한 진료에 대한 제재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은 의료의 질 확보 측면 외에 비효율성으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차등수가제를 의원급과 병원급에 함께 적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도대체 내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8월 31일	정개특위 활동 마감
2015년 3월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통과	10월 13일	선거구확정의 국회의원장에 대한 선거구 확정안 제출 시한 (총선 6개월 전)
3월 18일	정개특위 첫 회의	11월 13일	선거구 확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 (총선 5개월 전)
8월 13일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정한 국회정개특위의 선거구 확정 기준 제출 시한	12월 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총선 120일 전)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

▲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절차 출처 : 동아일보

유권자 A는 경상북도 문경에 살고 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문경·예천 지역구 후보들에게 투표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면 될까? 정답은 '모른다'다. 아무도 모른다.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5일,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확정을 하지 못해 예비후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매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내년 총선의 경우 법 개정 후 남은

시일을 고려해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는 지난 11월 13일에 확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선 지금도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이후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도 올해 3월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는 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주장하며 소모적 정쟁을 거듭하다가 법정 기한도 어겼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회 외부에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여야 대리전을 벌였었다. 그러다 결국 확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0월 13일(선거일 전 6개월)을 넘기고도 확정안 마련을 하지 못했다. 어렵게 국회 외부에 구성한 획정위원회가 독립성을 망각하고 여야 아바타 노릇만 하다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



▲ 10월 14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규탄기자회견

다 축소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의원 정수 유지, 비례대표 의석 7석 축소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최소한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수준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이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중립

적 입장의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비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고집만 부리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락을 떠나 비례성 확보라는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야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무책임 속에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락에 따른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다가 법정 시한을 앞두고서야 줄속으로 논의에 나섰다지만 시간만 허비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 불리해진다.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여야가 당리당락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줄속 선거구 획정의 구태가 또 반복되고 있다. 법정 시한 안에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여야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하루 빨리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12월 31일까지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무(無)선거구 상태가 된다. 예비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

#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 역행,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nari@ccej.or.kr



▲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현장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정부가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정권의 정통성과 유신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됐다. 역사교과서 국

월간경향

2015년 11월 12일

정화 회귀야말로 정치권력이 역사교육을 독점화 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고시를 확정했고, 47명의 집필진 구성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집필진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깜깜이’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것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학자와 교사, 학생 등 시민 불복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고 평가하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

유신시대 1974년판 국정교과서는 ‘반공주의에 뿌리는 든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중흥의 새 전기인 10월 유신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현대사 교육을 추구했다. 이것이 바로 유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꾼 이유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82년 발간한 『한국현대사』는 반공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어 전두환 정부, 즉 제5공화국의 수립이 ‘민주주의 발전의 새 전기’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정의사회 구현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했다.

역사교육은 좌우 어느 쪽이든 편향되어선 안 된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역사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학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균형잡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하는 순간 학생의 주체적 사고를 가로막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에 의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 국정화를 통해 하나의 획일화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명칭은 정부가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그것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하겠다는 대단히 ‘독선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역사관을 독점함으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봉쇄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자유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이

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2013년 UN은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국론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정부는 검정제가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획일화되고 정권 편향적 국정 역사교과서야말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없다. 교육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론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일부 검인정제도 문제는 개선을 통해 해결하자.**

정부는 역사교과서가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잦은 사실오류와 이념편향적인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한다. 검정 교과서의 심사기간이 짧고 전문적인 심사위원 확보가 어려워 충분한 심사와 오류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심사과정에서부터 역사적 사실이나 학계의 연구결과를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실오류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하면 된다. 즉

국정화 회귀가 아닌 검정체제의 개선·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과서는 통상 검정 후에도 통계자료 등을 계속 수정하게 되지만, 검정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사실오류를 줄일 수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교과서의 사실오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출판사는 스스로 앞장서서 오류를 찾아 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포상금을 주기도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이다.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하기 보다는 발전적 검인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필자  
정경민

2015년 11월 12일

#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경매로 전환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경실련은 11월 13일 국회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부산 시내면세점 1곳에 대한 선정결과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었다. 공청회는 경실련이 지난 7월

에서부터 9월 까지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원 입법 발의된 법안이 중심이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될 경우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는 방식이다. 시내 면세점 사업은 불투명한 재무제표, 독과점 문제도 있지만 사업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선정방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를 통해 선정방식부터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특허수수료 경매방식(가격경쟁방식)의 도입이 시급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독과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 매출의 0.05%만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5조 4천억원이었으나 특허수수료는 27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박 위원은 특허수수료 경매방식은 사업능력에 대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매를 도입하면 특혜시비, 로비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미 인천공항 면세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면세점 선정에서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실련 의견을 받아서 입법발의한 관세법 개정안(특허수수료 경매방식 도입)을 여야 국회가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매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위축 우려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군은 별도로 경매를 진행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진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경매방식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박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는 면세사업권이라는 공공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매방식 도입이 올바른 방향임을 주파수 경매를 예로 들어 강조하였다.

## 내수활성화를 들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면세점 업계와 이를 대변하는 전문가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유치해야하는데 면세점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특히 중국 요우커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 선정, 특허수수료의 사용 등도 면세점 사업 진흥을 통하여 방문객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해외 다른 면세점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수수료율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 중소기업은 매출액 0.5%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 결과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윤은주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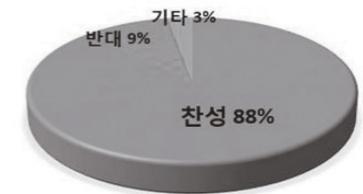
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림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2]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에 참석치 않은 재벌 면세점 측과 모르쇠로 일관해 개선의지가 없는 기획재정부.

공청회에는 재벌 면세점 업계를 섭외했으나, 결국 공청회 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의 면세점 사업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참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날 참석한 황병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현재 업무 담당자로서 어떤 방식이 옳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면세점 사업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관광사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관세법을 관장하고,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능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시내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해 관세법 3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지금 국회에는 경실련의 입법 의견을 받아들여 발의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중요한 3대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특허수수료 경매방식 도입과 독과점 방지조항을 골자로 한 개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면세점 사업자들의 별도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법안이다. 이 3대 법안은 조속히 여야가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들이다. 법안 통과를 미루면 미룰수록 재벌들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것이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가치는 해당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이 더 이상 재벌들의 배를 불러주는 특혜사업으로 유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 면세점 사업 토론회

-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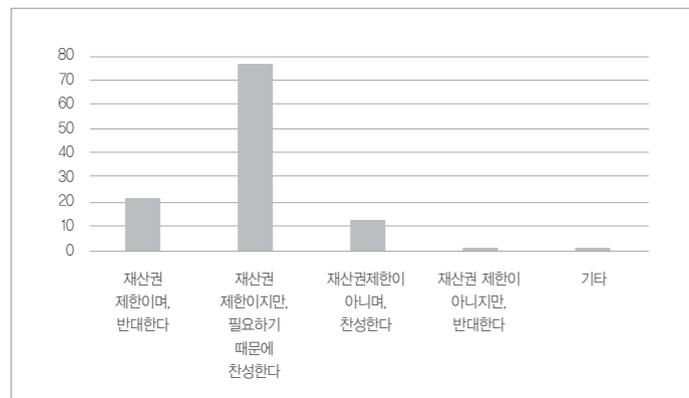
심각하다	110명 (99.1%)
보통이다	1명 (0.9%)
심각하지 않다	0명 (0%)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성 98명(88.3%), 반대 10명(9%), 기타 3명(2.7%) 순으로 조사됐다.

- 만약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표3>

재산권 제한이며, 반대한다	21명 (18.9%)
<b>재산권 제한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b>	<b>76명 (68.5%)</b>
재산권 제한이 아니며, 찬성한다	12명 (10.8%)
재산권 제한이 아니지만, 반대한다	1명 (0.09%)
기타	12명 (0.09%)



-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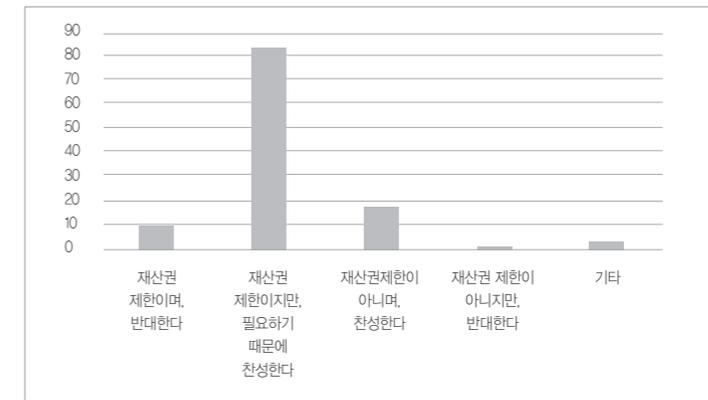
필요하다	107명 (96.4%)
필요하지 않다	4명 (0%)

재산권 제한으로 보는 입장은 90명(81.1%)이었고, 제한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18명(16.2%), 기타가 3명(2.7%) 있었다. 기타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정당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 만약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한다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표4>

재산권 제한이며, 반대한다	9명 (8.1%)
<b>재산권 제한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b>	<b>81명 (73.0%)</b>
재산권 제한이 아니며, 찬성한다	17명 (15.3%)
재산권 제한이 아니지만, 반대한다	1명 (0.9%)
기타	3명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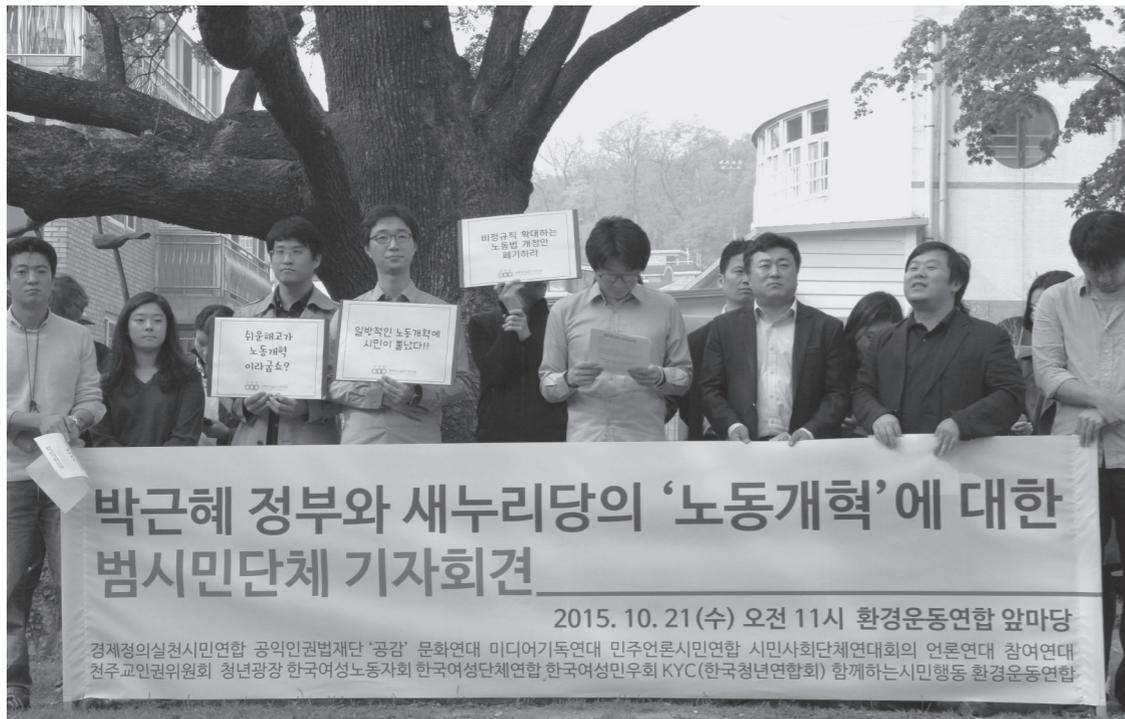
이번 설문결과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영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

에 머물러 있다. 경실련은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해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길 촉구한다.



#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시민이 뿔났다!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de@ccej.or.kr



▲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 모인 시민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과 여당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하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에서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4년 연장, 파견허용업종확대, 고용보험 보장성 축소, 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듯이 발의하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노사정합의가 발표 후 각계각층에서는 노동개혁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개혁을 지지하고자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모임은 10월 21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열렸다.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사회가 저임금 노동의 확산, 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

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데 이어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비판했다.

11월 19일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시민단체들이 모였다. 이 날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 모여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정권경관

2015년 11월 12일

또한 뿌리산업분야 파견노동 허용에 대해, 뿌리 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 노동 허용은 잦은 인력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은 하락시킬 것이다. 결국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 예측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자격은 높이고 하한액은 인하하여 보장성이 후퇴되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한다.



▲ 시민단체들의 '노동개악 난 반대세' 피켓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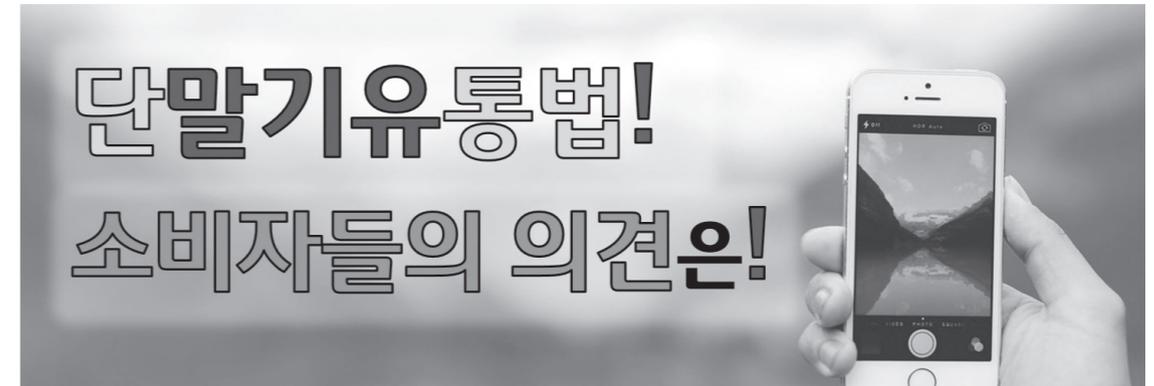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에 큰 공감을 표했다.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은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 경실련은 단통법시행 1년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당시 정부는 이용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단말기 지원금 관련 소비자 차별을 근절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는 자화자찬, 소비자는 불만

1년이 지났다. 2015년 10월 「단통법」 시행 1년

을 맞아, 정부는 「단통법」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용만 상승했고,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이익만 보장시켜 준 꼴이 되었다고 비

〈표2〉 「단통법」 제정목적 달성 관련 소비자 인식

(단위 : 명, %)

구분	개선되지 않았다	모르겠다	개선됐다
가계통신비 인하	721(95.4)	20(2.6)	15(2.0)
지원금 차별	628(83.1)	68(9.0)	60(7.9)
불법지원금 근절	610(80.7)	107(14.2)	39(5.2)
유통시장 신뢰 개선	716(94.7)	25(3.3)	15(2.0)

판한다. 뿐만 아니라 1주일 단위로 변동되는 지원금 상한액으로 인해 합법적인 소비자 차별을 발생시켜, 「단통법」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소비자 차별 해소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진짜 목소리**

경실련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총 756명의 소비자가 인식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8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이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95.4%에 달하는 721명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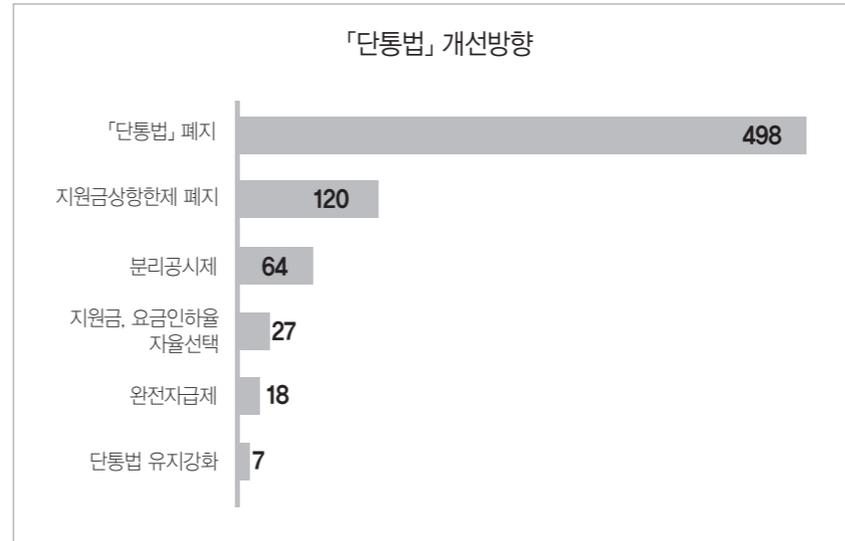
이는 소비자들이 「단통법」에 의해 소비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요금할인 20%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다는 정부의 평가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소비자 의견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일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군)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인식조사 중 「단통법」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 「단통법」 개선방향 관련 소비자 인식

라는 질문에 응답자 65.4%에 달하는 498명의 응답자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단통법」의 핵심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20명 (15.7%)에 달했다.

**「단통법」 폐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원래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는다. 이는 곧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차별이라는 미명하에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후퇴시킨다.

개선책은 명료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의 실패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도와 정책의 안착과 성공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 평가 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소비자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방법만이 「단통법」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인가

- 2015 세법개정안 돌아보기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지난 8월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그리고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 보였고 민생안정보단 고소득자를 위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작년 배당소득증대 세제처럼 크게 부각 되는 쟁점보다는 세세 하게 부자감세가



▲ 국회 본회의현장 출처 : 연합뉴스

이루어졌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법,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는 내용이 대다수다. 그래서 경실련은 전문가와 함께 평가하는 토론회도 개최하고 평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년 동안 법인세 인하·담뱃세 인상·임대소득 비과세 등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조세정책이 남발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할은 미미해져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더욱 양극화를 초래하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제들이 신설되고, 혜택이 남발되고 있다.

## 공평과세 대체로 허술, 비과세·감면 더욱 남발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찬 교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가 대체로 허술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비과세·감면혜택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정공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면대결은 피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sup>2)</sup> ISA,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자본의 초과공급인 상태로 ISA 등 저축지원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 8분위와 9분위의 경계소득은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모두 5,000만 원 미만인 수준인 상황에서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수혜층이 소득 9·10 분위 계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히 ISA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며, 자본의 과잉인 상태에서는 비효율적인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율의 인상 등의



▲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정부관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토론자들도 대체로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됐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건 세금 낭비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본소득(법인세·금융소득·양도차익·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자지를 옮길 이유와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낮춰둬 미국에서도 더 걷어가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미국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평가 의견서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경실련은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혜택들이 더욱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욱이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가 귀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ISA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농·어민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음.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수익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속되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15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런 의견을 밝힌 이후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청년을 고용한 창업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증여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혜택의 법안이 통과됐다. 창업자금 증여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건 청년 고용 문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용 확대를 빌미로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세제혜택이다. 갈수록 상속자산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속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만 안길 것이다. 이처럼 본질은 외면한 채 수단만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도 48년 만에 통과되긴 했지만,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가 아니고 시행도 2018년으로 유예한 것은 아직 완벽한 과세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임대소득 과세는 빠졌다. 법인세 정상화는 말하기 지켜올 정도로 외면하고 있

다.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몇몇 항목이 폐지됐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괄 과세의 허점을 보완하고 조세의 역진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미약하게나마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 폐지된 향수는 외국에서도 필수품이라 보기 힘들어 부가가치세에서도 가중치를 부과하는 품목이다. 경실련이 평가토론회와 평가의견서에도 지적한 ISA 제도 도입도 세부사항만 변경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결국,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위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외친 세법은 철저히 외면했거나 부실하게 처리됐고 무분별한 혜택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아무 결림돌 없이 통과됐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인지 되묻고 싶다. 점점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를 쌓기 힘든 현실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는 허술해지고 자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한가에 근본적 질문을 던져본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현실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혜택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정책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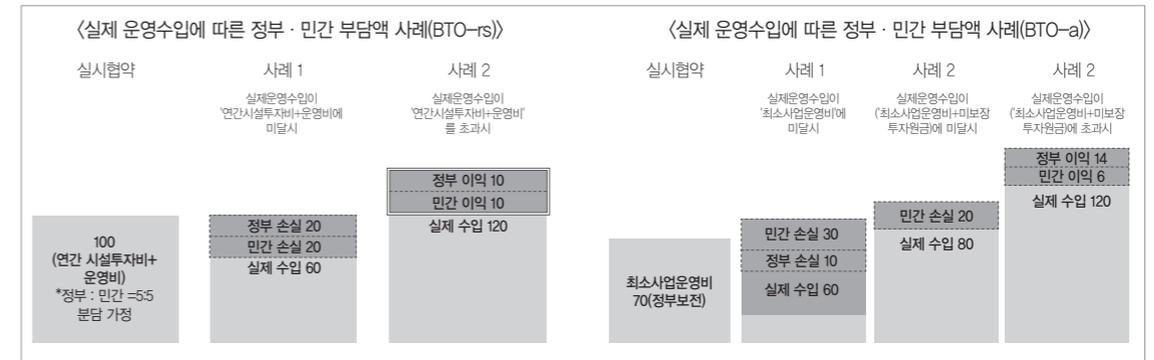
세법개정은 조세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편하고, 경제 상황별 적절한 지원책으로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매년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이런 저런 세제혜택들을 남발하고, 특경제층만 혜택이 돌아가게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제발 다음 세법개정은 국민이 동의하고 손뼉 칠 수 있는 세법개정이 되길 바란다. 

## 또다시 특혜!! 시민보다 기업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경실련은 지난 19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이란 국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비의 절반가까이를 세금으로 지

구사업 적용이 폐지되기까지 대부분의 민자사업에 적용됐다. 지금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지원했다. 최대 30년간 수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조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MRG의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은 2006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2009년 각각 신규사업에 대한 적용이 중단됐다. 그러나 아



▲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적용 사례

원해 주고 있어 이름뿐인 민자사업으로 전락했다. MRG란 실제운영수입이 예상한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2009년 신

직까지 시행령에는 조항이 남아 있어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올해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와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MRG제도를 도입



▲ 지난 19일 경실련은 최경환 기재부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했다.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보존해 주는 내용이다. 폐지된 MRG의 운영비용보장과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유형의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또다시 막대한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2011년 감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18.8조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조차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의 민자사업 세금지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경실련과 김성태의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3건의 국가관리 민자사업에서 MRG로

지급한 금액은 4.3조원에 달했다. 지자체 민자사업을 포함할 경우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파산을 우려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특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시민보다 건설업자들의 수익률 창출에 앞장서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의 고발 이후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 측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형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이다.

가령 손익공유형의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비의 7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과거와 보장정도는 달라졌지만 정부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MRG와 같은 방식이다. 만약 실제 수입이 사업운영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가 40%(70%-30%)이상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줘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 민자사업 정상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민자사업이란 운영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징수하므로, 사업의 위험 또한 사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도입한 방식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 지난달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자사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되는 결정이다. 이익 발생분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민자사업으로 흑자를 발생시킨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다. 이익환수 규정은 민자사업자에게 혈세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거짓 포장·속임수일 뿐이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수요예측 잘못, 민자사업자의 방만경영,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난달 국회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민자사업 개선을 위해 ▲건설사들이 운영권을 팔고 사라지는 BTO 대신 BOT로 전환 ▲단독사업제안시 유찰시켜 경쟁 강화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적용 ▲민간 수용권 박탈 ▲감독권을 의무화 하고 명령권을 강화 ▲재정지원 금지(용지비에 한해 제한적 가능) ▲투명한 정보 공개 ▲MRG제도입을 위한 BTO-rs 와 BTO-a

삭제 등이 제안됐다. 당시 발제를 맡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자사업이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수천·수조원의 사업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면서, 경쟁자 없이 매우 폐쇄적인 사업방식을 고수 하고 있다. 사업비의 80%가량이 공사비임에도 공사비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혜로 가득 찬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은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특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월간경향

2015년 11월 12일

# '무늬만 회사차'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권태환 시민권익센터 간사  
dopj@ccej.or.kr

최근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의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한다.

업무용 차량의 과도한 세제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이미 정부 및 여야는 물론 경실련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경실련, 업무용 차량의 실태 고발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고가차량에 대한 판매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심각한 세금누수 및 세금탈루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고발했다.

### 무늬만 회사차? 사모님차?

현행 세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량의 구매비용부터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 각종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 모두 가능하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1억원 이상의 차량 중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비중이 83.2%, 2억원 이상의 경우 87.1%에 달한다. 고가의 차량일수록 사업자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본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해도 현행 세법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업무용 차량의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은 결국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악용해 '절세가이드'라는 이름으로 고가차량 구입을 부추기고 있었다.

'무늬만 회사차', '사모님차' 등으로 불리며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의도적인 행위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성실



▲ 지난 7월 8일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 실태 및 세제문제 관련 기자회견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조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했다. 결국, 무분별한 혜택을 챙겼고 시민들을 기만했다.

또한, 현행 세법에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제한이 없다. 결국, 공감할 수 없는 고가의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운용해도 모두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경비처리 한도 설정"을 통해 우리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증명"과 "경비처리 한도 설정"이 필수이다. 이 두 가지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조건들이다.

###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 청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은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정부 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목적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업무용 사용 증명"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허점은 곧 무분별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차량운행일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통해 "업무용 사용 증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원 발의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구입과 임차(리스 등)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위의 한도만큼 차량을 임

특별기획

2015년 11월 12일

차할 경우 여전히 고가의 차량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사업자들은 차량 구입보다 임차 방식으로 고가의 차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뿐이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에 지난 11월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들과 개인 납세자간의 불신을 씻어내고자 '업무용 사용 증명'과 '경비처리 한도 설정'을 주요 골자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은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

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이제는 국회가 의지를 보일 차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 그 의무를 나누어 지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제도로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묵묵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성실한 개인 납세자들의 피해와 분노, 그리고 만연해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국회가 앞장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 



▲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기자회견

# G20과 UN : 변화하는 국제협력

이현아 국제팀 간사  
hyunah.hana.yi@ccej.or.kr

## 9월 UN총회, 11월 G20 정상회담.

2015년 한 해는 유독 대통령의 출타가 잦게 느껴지는 해였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선정되고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주한 해여서 그랬을까? 9월에는 제70회 UN총회, 11월에는 G20정상회담. 가을동안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의들이 진행되었다. 잦은 정상회담을 보면 늘 궁금한 점이 있었다. 왜 한 번 만났을 때 다 이야기 하지 않고 바쁘신 분들이 두 어달 있다가 또 만나는 것 일까? UN과 G20이 갖는 논의의 차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한이 종료되는 2015년. UN은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 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9월 UN총회에서 공표하였다.



▲ UN사진 un.org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은 (2015년 11월) 현재 193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국가는 동일하게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UN은 국제사회 경제와 사회, 평화, 구호, 개발, 환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UN은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했다. 2015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연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올해 UN의 최고 이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9개나 늘어난 17개 이다. 경제, 사회, 인류, 환경을 망라한 17개의 목표(월간경실련 148호 p.12-14)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행을 위한 자원이다. UN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조달러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G20을 설명하고 다시 이 재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G20, 구글세**

지구의 대부분이 나라가 회원인 UN과 달리 G20은 20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회원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이다. G20은 우리가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IMF시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국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하였다. 그러다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둘의 차이는 UN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이라면 G20은 20개 국가만 참여하는 것이고, UN은 사회, 경제, 인류, 환경에 관한 포괄적인 안전을 다룬다면 G20은 경제안전에 초점을 맞춰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UN의 올해 화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면 G20의 화두는 구글세이다. G20 용어로 다시 이야기 하자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Profit Shift: BEPS)이다. 2012년 OECD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며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구글, 스타벅스, 애플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각 국의 불일치하는 조세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왔다. 이 조세회피는

한 국가의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경쟁 왜곡의 원인이 되어 왔다. OECD에 따르면 이렇게 잠식된 세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최대 2400억 달러 까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1월 16일 발표된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하였다. 앞으로 조세시스템 투명을 위해 G20 회원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공조를 요청하고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약속을 재확인 하였다.



▲G20과 구글세  
flickr.com @number10  
(<https://www.flickr.com/photos/number10gov/>)

**G20과 UN**

앞에서 끊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면 UN은 새로운 목표 17개를 이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 UN은 G20의 BEPS 패키지를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공정한 세수를 확보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자원 가뭄에 단비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월 UN총회에 앞서 개최된 7월 아디스아바바 UN개발재원총회에서도 BEPS이슈가 뜨겁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BEPS논의는 G20에서 논의 해야한다와 UN에서

논의하자는 양분된 강한 이견만 남기고 논의의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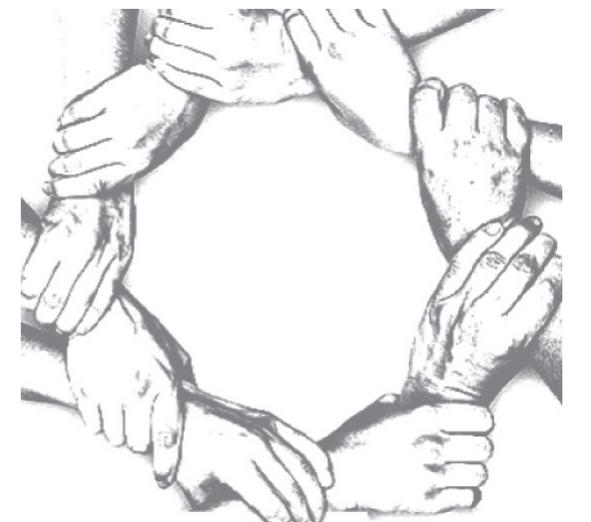
2015년 G20회의에서는 BEPS 대응방안이 채택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회사의 이익 활동과 국내기업의 국제적 이익활동을 생각하면 잠식되는 세원에 대한 대응 방안 이행은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을 위해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 사회, 인류, 환경을 망라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 (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0.25%까지 늘린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이를 못 지키고 축소하여 다시 약속을 한 만큼 공정하게 세수를 확보하여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쟁점과 우리의 노력**

국제사회가 공평과세와 세수확보를 위해 긴 시간 논의를 이끌었지만 과연 이 BEPS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논의가 어디까지 현실화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을

놓치지 말고 국내 조세형평에도 이용하고 세 확충을 위한 담론에 이용하여 정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회, 경제, 인류, 환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 많고 사회적으로 공급해야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는 세원이 건힐 수 있도록 잠식되는 세원을 찾아내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48

2015년 11. 12월호



# "아베정권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  
lolen86@ccej.or.kr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Zenko>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이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해외파병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다른 나라 군대에 탄약, 연료 제공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재밌는 사실은 법률 개정 전 남수단에 진출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에 탄약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점이다. 일본 현행법상 불법이다. 한국정부가 오히려 일본 재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도움을 준 셈이다.

- 안보법안 재·개정은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위헌 논란까지 감수해 가며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헌법 9조에 따르면 일본은 무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1972년 국회는 헌법에 의거해 일본이 자위권을 갖는 것이 분명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도 있다. 안보법안 재·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베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외 이권 확보에 이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 당시 일본 자위대가 진출한 이라크 '사마와' 지역의 플랜트 수출을 일본 기업이 많이 차지했다. 한국의 해외파병 역시 이면에는 이런 이권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정부 동의나 요청 없어도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아직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시점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인도, 아프리카도 가능한데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은 안 되겠는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보이면 일본의 자의적 판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

다. 북한의 인터넷(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공격이 가능하다. 심지어 무기·탄약 제공에는 핵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일본의 평화유지군(PKO) 파병 역시 당사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한일회담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생활 속에 운동이 지금의 일본 만들어**



▲ 일본 국회앞에 운집한 안보법안 반대 인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안보법안 재개정을 통과시켰다.

- 현재 일본의 여론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일본 국회 앞에서 수 만 명이 모인 광경은 무척 인상 깊었다. 일본 시민들이 연대와 결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 법안 통과 직후, 여론 조사에서는 강제 체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67%, 마이니치신문에서 65%로 나타났다. 안보법안 반대 기간 동안 2만~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참여다. 대표적인 단체는 쉴즈(shied)라는 대학생 단체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여주었다. 일반 주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대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부터이다. 우리는 2010년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원전반대 시위를 했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건강한 삶이 위협받자 거리로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모여 안보법안 반대 투쟁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시민들 역시 우리 자식들이 군대에서 직접적인 평화를 위협받는 문제가 되자 거리로 또 다시 나왔다. 시위는 처음에는 단순 안보법안 반대 집회였으나 아베퇴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권, 평화, 국민주권 등 일본 헌법에 기초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답이었다."



▲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반대 시위 일본 자위대 해외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진

- 어찌되었건 안보법안이 통과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베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로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발표한 아베노믹스 2단계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바로 GDP 600조엔, 출산율 1.8%, 개호이직(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제로이다. 허무맹랑 그 자체이다. 2014년도 일본 GDP는 490조엔

이며 2020년에 600조엔이 되려면 연평균 3%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률이 3%가 넘었던 것은 지난 1991년이 마지막이다. 출산율 역시 2014년 1.42%에 불과하며, 일본의 신자유주의적인 현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개호이직 제로 역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편법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아베 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현재 행동실행위원회는 매월 19일마다 전쟁법 폐지, 아베 내각 타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제헌절인 5월 3일까지 2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쟁법 폐지 서명도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일본 자위대 선제공격 훈련을 저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호주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상륙작전 중심의 선제공격 훈련이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일본의 연합 훈련 역시 상륙훈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헤노코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다. 헤노코 신기지는 미군과 자위대의 공용 기지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전쟁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법 폐지를 위한 통합단일후보를 준비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전쟁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최근 단독 후보를 내왔던 공산당 역시 호의적이라 기대가 크다. 여섯 번째는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 무기 수출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바라는 많은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경실련 경제민주화 특강

##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lde@ccej.or.kr



▲ 강의중인 최정표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최정표 교수가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정표 교수는 독점과 재벌문제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여 재벌문제 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경실련은 책 발간에 맞추어 최정표 교수가 저자직장으로 진행하는 경제민주화특강을 개최하였다. 11월 19일 첫 강의를 열린 경실련 강당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청중으로 가득 찼다.

첫 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무엇인

가?'를 주제로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위상을 짚어보았다. 최정표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은 무려 GDP의 90%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재벌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결코 국민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제구조가 재벌에게 치우쳐지면서 시장은 본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시장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재벌들은 계열기업끼리 내부거래에 치중하기 때문에 비재벌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대기업과 하청업체는 소위 갑을관계를 형성하여 강자는 중간강자를, 중간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며 생존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두 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강의의 시작은 재벌이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



▲ 강의 시작전 청중들의 뜨거운 열기

다. 재벌이 경제력 집중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부출자와 내부거래 때문이라고 한다. 순환출자를 이용하면 단 한 푼도 없이 다른 회사를 소유가 가능하게 된다. 재벌들은 계열사를 확장하여 그룹화하는데, 한국재벌은 경영전략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동네 빵집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다.

최정표 교수는 재벌세습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재벌은 자식에게 재산과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무리하게 편법과 비자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 커가는 속도에 비례한 지분확보를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경영권 세습을 위해선 더 많은 지분과 자본 확보가 중요하다. 때문에 오너들이 배임, 횡령 등을 서슴지 않으며 비자금을 형성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세 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 왜 안 될까'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대선의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였다.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당선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3년이 다 돼가도록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이런저런 지원

과 규제들이 완화되어 '경제민주화'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대선 핵심공약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이었음에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정표 교수는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기득권자들의 저항,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인들의 이중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정치인은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지만 그 이후에는 재벌과 영합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 색깔공세로 물어 버리는 현실도 정치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길 더욱 꺼리게 한다. 재벌이 대통령도 협박하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최정표 교수는 재벌은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푸념하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反)기업정서가 아닌 반(反)재벌정서일 뿐임을 지적했다. 모든 기업이 제몫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된 경제구조이고 이것이 실현될 때 국민들은 기업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차례 더 진행된 경제민주화 강의는 시민들의 시들어가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에 다시금 생기를 넣어주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모아 정치인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

-통일협회 DMZ기행을 다녀와서

홍유현 전주 우림초등학교 3학년 6반

엄마아빠가 비무장지대에 가자고 하셨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는 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지 않은 곳이란다. 엄마아빠는 우리끼리 가기 힘든 곳이라며 멀지만 한번 가보자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경실련통일협회에서 마련한 평화기행(10월24일~25일)을 통해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직접 다녀왔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다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이었다. '평화의 댐'은 북한군이 살수대첩처럼 임남댐에 물을 모아 터트려 남한을 공격하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평화의 댐'은 물이 없는 댐이다. 물이 없는 댐도 있다니 신기하다.

평화의 댐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말씀과 손 모형이 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손의 모형을 떠서 만들었다는데,

나도 그곳에 있는 모든 수상자들의 모형 손과 악수를 해봤다. 노벨 수상자들이 정말 많았다. 나도 이 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졌다.



주변에는 '평화의 종'도 있었는데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한쪽 날개만 없었다.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려고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나도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는 광경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비둘기의 날개는 언제쯤 붙여질까? '평화의 종'에는 데이지 꽃을 새겨 넣었는데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이라 이 꽃을 넣었다고 한다. 또 세계 각국에서 보낸 탄피들을 모아서 녹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기들이 사

라져서 전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게 아닐까 생각해 봤다.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온몸으로 울림을 느꼈다. 나는 세계평화가 빨리 되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소원을 빌어볼 걸...

다음은 강원도 양구의 '두타연'으로 갔다. 두타연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서 흐르는 물로 특급수라고 한다. 이끼가 끼지 않는 아주 맑은 물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손을 담가보니 시원하고 다슬기도 물속에 많았다. 두타연의 아름다운 산책로 바로 옆에는 지뢰밭이 있었다. 지뢰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다. 장난꾸러기도 여기에 와서는 모범생처럼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것 같았다.

첫날 마지막 장소였던 박수근 미술관에서 6억짜리 '굴비' 그림을 보았다. 한 마리에 3억씩이라고 해설가 선생님이 농담을 해 주셨다. 나는 굴비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왠지 맛있어 보였다. 아기를 업고 있는 소녀그림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난해 보였다. 옛날 여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되었다. 나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박수근 선생님처럼 멋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역시 화가는 뭔가 다르다. 박수근 선생님의 아내가 피난 중에 큰 항아리에 그림을 넣고 땅에 묻어두었다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어딘가에 아직 그림이 있다는 말에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날에는 양구의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다녀왔다. 이곳은 둥그렇게 파인 그릇 같다고



해서 펀치볼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있다. 힘든 고갯길을 돌고 돌아 올라간 '을지전망대'에서는 북한군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북한군이 햇볕에 옷을 말리고, 우물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였다. 담배는 건강에 나쁘는데...

제4땅굴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 만든 땅굴이다. 그 땅굴을 발견하고 통로를 만들기 위해 남한은 제일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동그랗게 또 다른 터널을 만들었다. 전동차를 타고 땅굴을 조금 들어가 보았다. 땅속이라 시원하고 물이 툭툭 떨어졌다. 사실 전동차를 타고 북한까지 가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조금 들어가다 멈추었다. 너무 시시했다. 북한군들이 판 땅굴은 작았다. 그 먼길을 작은 땅굴로 내려오다보면 허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000명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의 영향과 개선방안

임세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 위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95년 4월 이전	721(95.4)	17단계	96년 11월 이전	정액제	11단계
95년 4월	정률제	6%	96년 11월	정률제	8%
96년 11월		8%	98년 5월		12%
98년 3월		12%	2005년 3월		15%
98년 12월		15%			

\*자료 : 한국거래소

## 1. 가격제한폭 확대 내용

한국거래소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주식), 상장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 변동폭을 현행 상,하한 15%에서 30%로 확대 하였다. 즉,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폭이 최대 30%에 60%로 두배가 늘어난 셈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세 차례가 있었지만 모두 소폭으로 확대가 되었던 경우였고 이번처럼 두배로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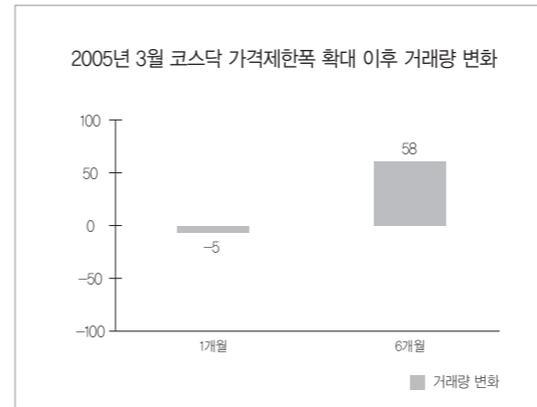
## 2. 도입배경 및 영향

가격제한폭 제도는 그동안 가격 안정화 장치로서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변할 경우 변동성을 완

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정보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를 보호 하는데 기여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격제한폭 확대를 도입하게 되었다.

가격제한폭으로 인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 기능을 저해 했다는 근거로 가격제한폭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의 투자유인 심리를 자극하여 오히려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상,하한가 형성 다음날엔 주가가 과민하게 반응 한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현상 등이 발생하였으며, 상, 하한가를 이용하여 주로 개인투자자를 손실로 이끄는 상한가 굳히기,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손쉽게 활용하기도 하였다.



\*자료 : 한국거래소

또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발생했

을 때 실제적인 가치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합리적 가격 형성 지연, 가격의 불연속성 증대, 시장 유동성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의 효율성 증대 및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가격제한폭 확대 초기에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관망심리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잠시 위축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 급변은 대부분 중소형주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주가 한 종목이라도 상,하한가를 기록한 날은 전체 거래일 중 1.6%였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한가는 100%, 하한가는 74%에 달했다. 즉,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이 중소형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의 과열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격제한폭의 확대는 하락에 대한 기대치가 기존보다 두 배가 높아지게 된 상황이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주가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가 활성화되어 공매도투자가 수월하지 않은 일반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외변수에 노출도가 커 변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가 자칫 예측하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 3. 도입 후 상황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6월15일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작되었고, 5영업일이 지났을 때까지는 시행전에 기대하고 우려했던 일은 거의 없이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제한폭 확대 시행전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변동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증가기준 총 32번의 상한가가 발생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절반에 못미치는 14번이 발생하였으나, 기간 중 발생했던 하한가 4번은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상한가32개의 종목

중 대부분 우선주는 24개로 75%가 우선주에 쏠렸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중간 배당을 앞둔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 일 수 있지만, 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 특성상 특별한 호재 없이 수급만으로 상한가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 배당성향이 커졌을 경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가격 괴리가 크다면 투자의 매력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급만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적게 된다면 악재나 기타 영향으로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만큼의 낙폭에 대한 충격도 커질 수 있다.

#### 4. 개선사항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시장과 투자자에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까지 관찰된 현상에서 본 것처럼 하한가가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나왔듯이 소형 개별주들의 위험 노출도가 크다.

그리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만으로 가격조정이 수월한 우선주가 가격제한폭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현상 등 개인투자자의 세심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별투자자의 성숙도에만 맡길 만큼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보다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가격제한폭 확대에 앞서서 가격안정화 장치의 개편 및 보완제도를 마련하였다. 시장차원으로는 서킷브레이커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게 강화되었고, 개별종목 차원으로는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가격 대비 10%이상 가격 변동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장치를 비롯하여 대용증권 제외종목추가,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별, 종목별 과거 발동내역등을 공지하는 등의 제도를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이나 반대매매 관련 변화, 장중 추가 위탁증거금 도입 등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에 인하여 시장에 이용가능한 정보들이 주가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대칭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데, 정보의 접근성이 빠르고 광범위하며 리스크관리등이 수월한 기관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일반 개인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어 투자위험의 노출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대칭적인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강화, 시스템화 된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구축, 일별, 종목별 모니터링 강화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가 및 보완하여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고 투자자들 및 기업에도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우수 지역경실련 수상 유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jdg42co@hanmail.net



▲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대구지역 내부에서도 대구를 시민운동의 불모지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작지 않지만 대구지역의 시민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열약한 것 같지는 않다. 시민운동의 활동영역, 시민단체와 회원 수, 활동력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시민단체의 지역조직(전국단위 단체)은 거의 다 있고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인권, 여성,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 평화, 문화 등 특정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지역단위 단체)

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시민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단위 단체의 활동력은 전국단위 단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일부는 전국단위 단체보다 전문성이 뛰어나고 훨씬 더 치열하다. 이러한 지역단위 단체의 전문성과 운동성은 시민운동의 분화, 전국단위 시민운동의 영향력과 활동력 저하 등과 맞물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활동영역, 대상, 방법을 스스로 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 밖에서도 그걸 요구한다. 이는 시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민단체에 단체의 정체성, 능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라는 압력으로 그에 대한 압박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 대구경실련인 것 같다.

가끔 만나는 한 전국지 기자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진영보다는 연고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 연고는 진영을 초월한다고 한다.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대구는 특히 심하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인정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등 각종 조직, 집단의 구성원이 그 조직, 집단의 부패행위 등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송곳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는 말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대구지역에서 내부고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는 대구경실련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내부고발과 제보자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대구경실련의 태도는 특별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다. 대구경실련을 찾아오는 제보자들도 그렇다고 한다. 대구경실련이 내부신고, 제보자에게 특별한 태도를 갖게 된 계기는 신상이 공개된 제보자의 고통을 목격하면서부터이다.

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로 밝혀진 구조적인 비리와 파급력도 특별한 태도를 갖게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부터 대구경실련은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내부고발, 제보자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부패 통제, 제보자 보호와 지원 등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활동과제를 찾거나 기존에 전개하던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구경실련이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운동'이다.

대구경실련이 공공기관도 아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섬유산업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등 대구지역에 소재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실

패한 사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지역산업섬유산업진흥사업 이른바 밀라노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대구시의 출연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관심 또한 밀라노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대한 관심을 행동과 운동으로 표출한 시기는 내부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로 한국패션센터의 비리가 드러난 2006년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밀라노프로젝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전개했다. 대상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반,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활동은 각종 비리에 대한 산발적인 대응, 일회적이고 선언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상근자 중심의 활동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중앙위원회에서 보고한 대구경실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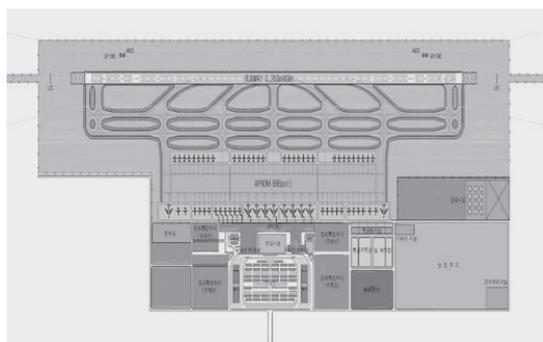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할 대구경실련의 모범운동사례로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운동을 제출할 때 상당히 망설였다. 이 활동이 대구경실련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범운동사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활동의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계획한 일, 특히 회원 등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한 일 등은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를 모범운동사례로 제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실련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모범운동사례로, 대구경실련이 우수 지역경실련으로 선정된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죄송하고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의 구성원들은 이를 모범적인 운동사례를 만들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실련다운, 대구경실련다운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

#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사업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chejungo@hanmail.net



▲ 제주도 제2공항 조감도

로 예측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은 저가항공사의 등장과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 항공 여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320만명, 올해 9월까지 1928만명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2830만명, 2025년에는 약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 제주도정은 들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당혹·불안

제2공항 건설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을 감안할 때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도민사회의 오랜 숙업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 제주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인프라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정은 한층 들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정작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마을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주 문제를 비롯해 항공기 소음 피해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자 부지 인근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뒤 제주에서 열린 첫 경매에서 제2공항 부지 인근의 임야가 감정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각종 토지거래 홍보물에는 '제2공항 확정 부지 인근', '투자 곳' 등의 홍보 문구가

뜨기 시작했다. 미리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공항 인근 토지 중에는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매매를 보류한 곳도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2공항이 들어서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신산·난산·고성·수산 등 5개 마을 토지의 40% 정도가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의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산읍의 경우 올해 3분기(7~9월) 지가 상승률이 3.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2공항 건설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투기 현황이 포착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 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건설 확정

25년간 논의만 거듭하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포화직전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 2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추진한다고 11월 10일 발표했다. 제2공항 입지는 성산읍 온평리를 비롯해 신산·난산·수산·고성리 등 5개 마을에 걸쳐져 있다. 약 500만㎡(150만평) 부지에 건설비 4조1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착공, 2025년 개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를 통해 2018년이면 제주공항이 완전히 포화할 것으

**설익은 에어시티 사업 되레 혼란만 부추겨**

또 다른 문제는 제주도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원희룡 제주도지사다. 원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2공항 주변지역을 에어시티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2공항 주변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쇼핑·컨벤션·금융·물류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상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원 지사의 발언 수위를 볼 때 에어시티 사업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에어시티 사업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4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도민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항공 전문가는 “인천공항이나 프랑스 드골공항 등이 에어시티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환승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허브공항도 에어시티 사업을 성공하는 게 힘든데 제주공항에서 에어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을 에어시티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고 있으나 이들 공항의 경우 허브공항의 실질 지표인 환승률이 30~40%대로 제주공항과는 비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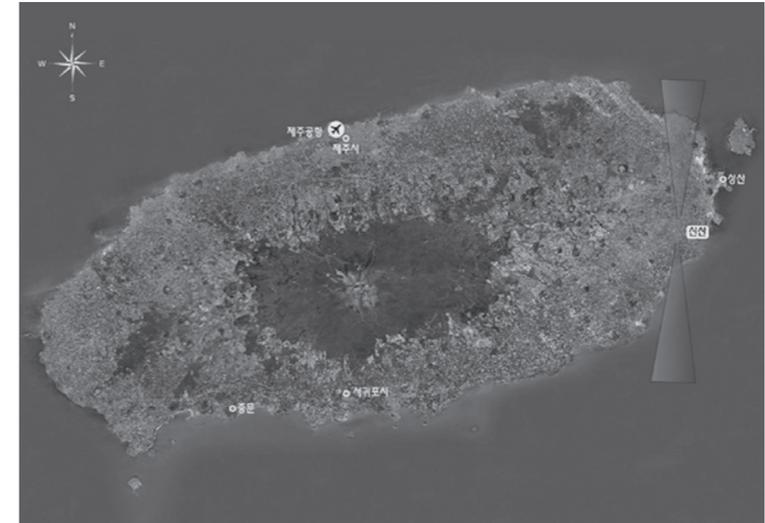
수 없을 정도로 환승객이 많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도 환승률이 고작 16%에 불과할 뿐이며, 영종도 등 공항 주변지역에 에어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키폴공항의 경우 활주로 6본, 취항 항공사 120여개, 연간 수송여객은 4500만명이며, 고속도로와 철도·항만시설 등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 물류·유통 중심의 에어시티로 개발된 사례다. 창이공항의 경우 주변에는 거대한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 있어 카지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뜯구름잡기 ‘에어시티’에 골몰할 게 아니라 제2공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책 마련해야**

문제는 제주 제2공항은 스키폴공항이나 창이공항과는 지리적 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들 공항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2공항 주변지역에 에어시티를 조성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의 에어시티 사례에서 보듯 민자유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자본 규모가 열악한 도민자본보다는 대자본 중심의 국내·외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득은 도민에게 돌아오기 보다는 역외로 유출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에어시티 사업은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하고 그 실체가 모호한 데다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말 그대로 검증되



지 않은 사업이다. 에어시티 부지 일대의 환경 파괴 문제를 비롯해 부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찬반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먼저 방향성을 정해 놓고 추진할 경우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또 다른 환상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에어시티 사업은 도지사 혼자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해

야 한다.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선불리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되레 화를 자초할 뿐이다. 원희룡 제주도는 지금 실체도 불명한 ‘뜯구름 잡기’ 식의 에어시티 사업에 몰두할게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한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때다.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kjcej@hanmail.net



▲ 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

전국에 경실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8월 광주경실련 사무처 개편에 따라 시민운동에 첫발을 내딛은지 3개월이 지나 막 수습 작업을 뚫은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동헌, 기획부장 박수민입니다.

시 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광주경실련 김덕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광주 지방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일환으로 기준면적 85㎡이하의 기존(다가구, 다세대 등)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최장 20년간 시세의 30%수준 (월 6만원~13만원)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3년 동안 514억을 들여 870호의 기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불가, 기준점수 미달 등 주거조건이 열악한 부적합 주택을 다수 매입하여 200세대 이상의 공기를 양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양질에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좌초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로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그로인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광주경실련은 중소상인들의 편에서 대기업 유통사업의 무분별한 입점저지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법률지원위원회 심재

전직 무소속 구의원, 방송작가라는 상근 활동가로서 조금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험을 살려 광주경실련 발전에 그리고,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25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감동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에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경실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앞으로 25년 더 계승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저희 사무처 식구들은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광주경실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흥, 이정학 변호사님의 수고로 4년간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입점하려던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내 입점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전대)와 계약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주중소상공인지원네트워크 및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건설반대추진위원회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점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지 내 입점해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의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대구의 홈플러스 스타디움점에 대하여 광주, 부산, 대구 경실련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민이 말하는 호남의 다음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번의 토론회와 2번의 강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래세대 정치주역 청년정치를 이야기하다”는 주제로 청년의 문제를, 두 번째 이야기는 광주전남 기자회견과 공동주관하여 “다음시대 정치주역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호남정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모시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는 주제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12월 1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주관하여 청년배당 등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시고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지역의 첨예한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능력의 부족함을 알지만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광주경실련은 또 다른 25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앞으로 그동안 함께 고민해주지 못했던 청년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청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학경실련을 부활시켜보고자 합니다. 교육장이 있는 보급자리를 마련하여 어린이 경제학교 등 교육사업과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더욱 그렇지요. 불런티어로서만 참여하다 막상 상근 활동가가 되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둠의 터널 끝을 향해 신발 끈 동여매고 시민들에 든든한 동반자로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늘 앞장서는 광주경실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경실련 활동가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그리고, 경실련 회원님들의 응원을 기다리면서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 “20대가 느끼는 삶의 단상은...”

## 지선미 회원 인터뷰

오세형 기획총무팀 간사  
dipsec@ccej.or.kr



▲ 지선미 회원

**Q. 본인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대다수가 아픈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픈 사람의 입장을 100%로 이해는 못해드리지만 그 입장이 되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엔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8세 직장인 지선미입니다. 회원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 즐거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Q.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A. 전부터 봉사쪽에 관심도 있었고 플랜코리아에서 한명의 아이를 지정받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도움이 결국에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Q. 행복하신가요? 아니라면, 행복하다면 무엇이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요?**

A. 행복합니다. 잘살거나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생활도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Q. 대한민국의 20대로서 살아가는 단상은 어떠하신가요?**

A.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규직은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세상이어서 불안하다고 할까요.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물가는 연일 상승하는데, 정작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소소한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실련이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나요?**

A. 자유와 평등 두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사회 모습을 보면 평등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해요.

**Q. 연말이되면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것도, 사회적 것도 좋습니다.**

A. 산전수전, 각인된 하나의 큰 일보다도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도 하고



▲ 미국여행중의 지선미 회원

여전히 좌충우돌도 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0살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기도 하고요.

**Q. 2016년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A.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Q. 회원님에게 경실련이란...?**

A. 앞으로가 더 기대 되는 곳?! 사실 아직 경실련이 하는 일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회원으로서 조금씩 알아가려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

# 클래식 전문점, 풍월당에 가다

정유림 정치사법팀 간사  
square520@ccej.or.kr



▲ 음반매장 영업시간은 정오 - 오후 9시. 매주 일요일 휴무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에 내려서 어느덧 쌀쌀해진 공기를 느끼며 걷기를 10분쯤. 풍월당이 있는 빌딩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문이 열리면 따스한 조명의 풍월당 입구가 나를 맞이한다. 좌, 우로 벽면을 크게 장식한 음악 강연 이야기들, 음반 이야기들을 읽으며 나아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넓은 음반 매장이 시작된다.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는 이곳에서 다양한 음반을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서점의 음반매장에서도 클래식 음반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 클래식 매니아들이 가장 즐겨 찾는 매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12년 전통, 한국의 중심에서 클래식을 외치다!**

압구정에 위치한 풍월당은 2003년도에 국내 최초의 클래식 전문 레코드점으로 개점했다. ‘풍월당(風月當)’이라는 가게명칭은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겼던 선조들을 기억하기 위해 청풍명월(淸風明月)에서 따왔다. 흔히 클래식이라면 평소에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풍월당을 만나면 어느새 클래식이 벗이 된다. 전 세계에서 최신 발간한 클래식 음반부터, 클래식의 고전 명반까지 전문 음악 큐레이터가 손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다.

얼마 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첫 국내 음반이 발매되던 날, 이례적으로 아침부터 백 명이 넘는 클래식 매니아들이 아침 8시부터 미리 줄을 서 가며 가장 먼저 음반을 구매하려고 이곳 풍월당으로 모여들었다. 한국

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의 음반이기에, 다른 나라들 보다 한국 팬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었다는 풍월당의 의지(!)로, 특별히 평소보다 세 시간 이른 오전 9시부터 판매가 예고되었다. 아침 일찍 찾아올 팬들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전날 밤을 새며 포스터, 액자, 쇼팽 콩쿠르 안내책자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하였다고 한다. 단순히 음반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렇다면 팬들이 왜 이곳을 즐겨 찾는지도 조금은 납득이 될 것 같다.



▲ 조성진 콩쿠르 실황을 틀어주는 카페

## 커피 한 모금, 클래식 한 소절

매장을 나와 처음 들어왔던 입구에서 곧장 직진하면 풍월당 내 카페, 로젠 카발리에다. 1900년대 경의 빈 카페를 서울에서 재현한다. 이곳 역시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지만, 여느 카페들과는 달리 떠들썩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다. 각자 눈앞에 책이나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하게 음악을 즐긴다. 커피가 있고 사람이 있는 공간에 배경음악이 흐르는 것이 보통의 카페라면, 이곳은 음악이 있는 곳에 사람과

커피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었을까. 나도 잠시 객(客)이 되어 음악 속에 잠시 머물러본다.

## 올바른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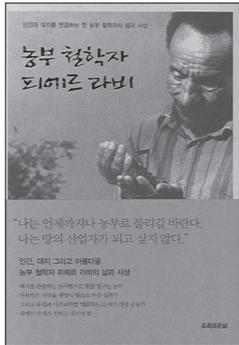
한층 위에는 주로 강연이 열리는 공간인 아카데미, 구름채가 자리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을 필



▲ 강연과 쇼케이스가 열리는 구름채

두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한 강연이 열린다. 문학, 철학, 미술 등 인문학 전반을 강연에서 다루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술과 사회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으며, 과거와 현대를 허문다. 정기적인 월례 강좌 외에 특별한 강좌들도 때때로 열린다. 쇼케이스 형식으로 직접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풍월당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색하면 눈여겨봐주시길!!

풍월당은 이제 한국 최초의 클래식 전문점이자, 마지막 남은 클래식 음반 판매점이 되었다. 풍월당의 이념은 아래와 같다. ‘풍월당은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올바른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의 공론장이 되기를 꿈꿉니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장 피에르 카르티에, 조화로운삶**

이수련 국제팀 간사 srlee0326@ccej.or.kr

풍요로움과 번영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의 소재가 된 주인공 피에르 라비는 알제리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화와 산업화가 파괴한 과소비 사회의 위기를 목격한 후 한평생 생명농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전파한 생명농업 학자다. 그는 인간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살아야 하며 욕심은 언젠가 파괴를 불러온다는 가치를 평생의 삶을 통해 실천했다. 현대인의 삶에 그가 주는 메시지는 이상적이고 불확실하게 들리지만 적어도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주는 의미는 확실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의 삶의 질과 발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보통, 원조를 하는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다. 최근에는 수원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그 입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정부의 입장이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업이 현대화와 경제적 발전을 미덕으로 하는 서구중심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한다. 이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가? 개발은 수원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줄만큼만, 그리고 그 방법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함을 이 책은 말해준다. 현대화는 지상 최고의 유일가치가 아니다. 현대화가 전제로 삼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발전가능성, 자연을 착취의 도구로 바라보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대화는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 따름이다.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력이 불안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피에르 라비의 이야기에서 조금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망가져버린 최빈국들의 삶을 적어도 그들이 원래 누렸던 수준으로 되돌려주고 국가의 이기심으로 수원국을 이용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무엇보다 필자개인에게는 피에르 라비의 겸허함을 잊지 않고 스스로의 초심을 기억하는 일일 것이다. ☺☺☺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인가요?  
〈긍정의 배신〉 바버라 애런라이크 저, 전미영 역, 부키**

김용석 사회정책팀 간사 cumdo@ccej.or.kr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다 잘 될 거야', '힘들수록 웃어야 돼' 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N포 세대, 헬조선 등 암울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신조어가 쏟아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이고자 노력한다.

저자 바버라 애런라이크는 유방암 진단을 받는 위기에 처하면서 '긍정'에 대해 의심했다고 한다. 암 투병자를 생각하면 슬픈 얼굴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의외로 낙관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암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해 준 선물이고, 단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진실로 여겨진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까진 좌절감에 빠지는 것보단 반강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긍정 이데올로기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크릿', '긍정의 힘' 같은 자기계발서는 긍정적 사고는 성공의 열쇠이자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실패한 것은 온전히 자기 책임이다.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자기계발서는 '우리는 해고당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 최고 멋진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나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 문제나 기업문화의 부당함을 말하는 대신, 긍정적이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동기 유발에 더욱 매진하게 만든다.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긍정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미리 말하자면 저자는 서문에서 긍정 에너지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자가 비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책 속에 나와 있다. ☺☺☺



# 2015년을 보내며

오세형  
기획총무팀 간사  
dipseo@ccej.or.kr

월간경실련은 명칭은 월간이지만 실제 발행은 격월간이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월간이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격월간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러면 한 해에 발간되는 책은 총 6권이다. 올 한 해 발간된 월간 경실련을 되돌아보며 2015년 월간경실련을 마무리 해본다.

올 해 첫 월간경실련의 표지기사는 '영리병원. 의료체계 붕괴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했다. 그 도입은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3,4월호는 박근혜 정부 2년을 지나면서 대선 공약의 이행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표지기사로 다뤘다.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나온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D학점'으로 낙제점이었다.

경실련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상징을 갖게 된 것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온전함을 나타내는 원에 기반하여 세 개의 큰 원과 작은 원은 많은 사람을 상징하고, 포개어져 있는 원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감싸 안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으로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새 OI가 5,6월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올 해 MERS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내실화 필요성도 지적하는 내용이 7,8월호의 표지기사였다. 'MERS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내걸었던 '새천년개발목표'가 일단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국제아젠다가 정해졌는데 그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이다. 국내 적용과 실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내용이 9,10월호의 표지 내용이었다.

11,12월호의 표지기사는 무엇인가? 보시는 바와 같다. 2016년에는 어떠한 다양한 이슈들이 월간경실련의 표지를 장식할런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경실련의 힘찬 활동을 기대한다.

#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어드립니다 ^^

## SNS에서 많이 본 경실련 소식

### ■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기자회견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ccejjustice)

### ■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공청회

지난 11월 13일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중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기초발제를 하였고 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알찬 공청회였습니다. (/ccejjustice)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 김봉진 |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로와야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의는 더욱 정의로와져야 한다.
- 김영현 |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제정의실천을 위해 나아가주세요
- 김홍업 | 지금처럼 잘 합시다!
- 최철화 |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 송다겸 |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얻은 약간의 재능이 다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트위터 @cyberngo

전송 02-741-8564~5

Homepage	Twitter	Facebook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 2015. 09

- 09.15 “노사정 합의, 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 각료들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 09.21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입장 발표
- 09.22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 09.23 상품권 관련 피해 보상법 제정 촉구
- 09.25 서울 의료원 부지매각 2차 유찰에 대한 입장 발표
- 09.30 복지부의 차등수가제에 대한 입장 비판



## 2015. 10

- 10.01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  
민자사업 현황 정리 발표
- 10.06 경쟁없이 기업에 특혜주는 민간재난방식에 대한 의견 발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 10.08 경실련, 김성태 의원 민자사업공동분석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 역행 정책 비판  
2015 국정감사평가 결과 발표
- 10.1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
- 10.13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민자사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10.14 선거구획정위원회 비판 기자회견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
- 10.16 GMO 벼 상용화 반대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입장
- 10.19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 10.20 정부와 국회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촉구 기자회견
- 10.21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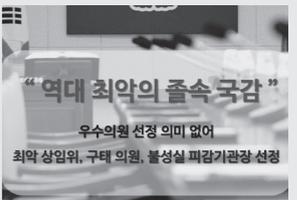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0.22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사장 자격이 없다  
정부는 한반도에 육일승천기를 날리게 할 셈인가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관련 기자회견
- 10.23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10.27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성명 발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에 대한 입장
- 10.28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아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10.29 건축물 안전과 공공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박근혜 정부의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10.30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의견



## 2015. 11

- 11.01 인터넷 실명제 폐지 촉구 성명
- 11.02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견서 제출
- 11.03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에 대한 입장
- 11.05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토론회
- 11.06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 토론회
- 11.11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11.12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1.13 면제점 사업 공전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 11.17 국회의 기재위의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 촉구  
2016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 2015. 11

- 11.19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회 보복위의 GMO 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 11.20 2015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11.23 기획재정부의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 1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법안 폐기하라
- 11.25 2015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꿈수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 11.26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새누리당의 위험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 11.30 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 2015. 12

- 12.02 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12.03 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의견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라”
- 12.04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 12.08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법 개정안
- 12.09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76명, 가입일 : 2015년 9월 15일 ~ 2015년 12월 9일)

고려가스(주)	김민정	김용선	남재걸	박상민	배석운	신중환	오병찬	이경호	이은희	장다감	조현지	함미경
유용진에너지	김봉진	김은하	남정근	박상원	백승호	신중환	오승용	이광식	이정준	전규정	주재호	현지혜
주영진종합건설	김상수	김을수	노규성	박선영	서미화	신해송	오치홍	이광호	이재량	정상중	최경희	형민우
이천영농조합	김석채	김장기	노윤경	박영길	서삼례	신홍식	오현주	이동정	이정환	정상현	최다니엘	홍명근
청강사회연구원	김선철	김종태	리형연	박이화	서상기	심해인	우혜정	이민지	이종덕	정수진	최성주	홍선영
강일영	김성웅	김춘식	류봉호	박재순	성치원	심화섭	유국렬	이보향	이종호	정순배	최성진	홍찬의
강창조	김성택	김준옥	류숙경	박종근	손영호	안병천	유록수	이봉주	이주현	정연규	최준식	홍해용
고경업	김세준	김평환	류용걸	박창현	송다겸	안태희	유미숙	이수호	이진수	장언이	최철화	
관정아	김시형	김현진	문윤순	박창호	송정호	양성하	유주상	이승건	이차영	정장영	최혁재	
권태연	김영준	김형수	박갑석	박태규	송태화	여만식	유희경	이연주	이철우	정장환	추재훈	
김경수	김영현	김형우	박경서	박홍열	송형일	연규순	윤상현	이영식	이충희	정지원	추재훈	
김광수	김예시	김홍업	박기환	박희영	신동우	연인하	윤희용	이용준	이현석	제미경	한민호	
김남수	김완희	김희연	박도현	배동이	신성철	연 준	이강선	이 옥	이혜정	조원일	한병수	
김미란	김용규	나성민	박상기	배백호	신영옥	오민범	이경오	이은경	임순옥	조철호	한중석	

본부	김지영	곽지웅	권윤희	김근수	김영목	김상균	김숙희	김용석	김익수	김종근	
(주)아이티엔티	강창걸	곽효석	권일민	김근철	김명애	김상균	김순임	김용섭	김인근	김종덕	
군산경실련	강창구	곽희남	권준기	김근초	김명임	김상영	김승보	김용숙	김인선	김종록	
고려대학교 고학연회	강창균	구경이	권준석	김기숙	김명철	김상우	김시연	김용식	김인숙	김종목	
보이앤비(주)	강철규	구길두	권준우	김기열	김명환	김상중	김애자	김용직	김인영	김종민	
아름다운한의원	강철승	구성찬	권 찬	김나리	김무준	김상현	김양규	김용찬	김인태	김종배	
크레텍책임(주)	강현신	구수정	권철민	김나리	김문환	김생수	김양수	김용철	김인환	김종섭	
피터엘드스텍	강혜정	구지홍	권태환	김남덕	김미진	김서현	김양진	김용철	김일수	김종우	
한국산업재정경제조합	강홍천	구혜인	권향년	김남언	김민수	김석환	김연주	김용태	김재구	김종찬	
	강경수	경민수	권경우	권혁민	김남훈	김민재	김선필	김영미	김용태	김재구	김종혁
	강국신	계총미	권경숙	권호철	김대균	김민주	김선화	김영복	김용하	김재길	김주목
	강내원	고강석	권계옥	김강민	김대선	김병각	김선희	김영선	김용호	김재일	김주영
	강덕순	고경일	권구혁	김건호	김대성	김병구	김성민	김영섭	김우비	김재하	김주영
	강명구	고말임	권규향	김경모	김대중	김병성	김성수	김영순	김원석	김재화	김주홍
	강문희	고명희	권동현	김경배	김대현	김병수	김성수	김영실	김원태	김재환	김 준
	강민구	고 율	권득용	김경수	김대호	김병수	김성숙	김영은	김유훈	김정국	김준배
	강상구	고은진	권상웅	김경수	김대훈	김병수	김성일	김영재	김유신	김정돈	김준석
	강선미	고지석	권상주	김경아	김동균	김병주	김성중	김영주	김유진	김정수	김준식
	강성일	고진강	권상현	김경준	김동영	김병학	김성태	김영준	김유찬	김정신	김준영
	강성주	고행산	권성윤	김경철	김동욱	김병호	김성필	김영준	김유환	김정욱	김준한
	강영식	고형석	권순범	김경환	김동울	김보경	김세정	김영철	김윤기	김정원	김준호
	강영훈	공병욱	권순용	김관영	김동호	김보라미	김세준	김영출	김윤두	김정현	김지연
	강용수	공정표	권영봉	김관용	김동환	김보람	김세중	김예승	김윤석	김정호	김지영
	강원호	공진하	권영준	김광배	김래관	김복환	김세중	김원래	김윤식	김정호	김지현
	강은현	공태영	권영진	김국주	김만수	김부경	김세진	김완배	김윤희	김정호	김지혜
	강일환	곽기훈	권오진	김귀해	김만호	김 상	김소라	김완욱	김 용	김정훈	김지호
	강재혁	곽남준	권용규	김규범	김명균	김삼용	김소희	김왕식	김은영	김제영	김진구
	강주현	곽새별	권윤정	김규훈	김명기	김상겸	김수영	김용남	김의수	김종걸	김진담



김진만	김행선	남호현	박기영	박영남	박진아	변준섭	손희준	안용식	원영진	윤인오	이기현	이석기	이윤규	이창희	장미은	정명채	정준수	조재원	최다정	최지훈	현승근
김진명	김현동	노연경	박기철	박영민	박진홍	변창우	송기민	안인화	원재환	윤일성	이기호	이석범	이윤배	이철우	장인수	정미숙	정종식	조정근	최덕천	최창배	형성훈
김진석	김현덕	노재훈	박기훈	박영수	박창민	사동천	송기성	안정혜	원종호	윤재웅	이낙원	이석원	이윤상	이춘수	장병호	정미화	정진민	조종철	최덕호	최태영	홍광선
김진수	김현석	노정호	박남규	박영웅	박창임	서경호	송미영	안종범	원혜영	윤정섭	이남경	이석재	이윤호	이태섭	장보름	정범석	정찬식	조준범	최동욱	최현정	홍대식
김진아	김현성	노희철	박남수	박영철	박철수	서순탁	송민정	안지현	원홍식	윤정중	이다혜	이석제	이은재	이태영	장삼기	정병록	정창률	조준형	최명희	최현준	홍도천
김진현	김현수	라윤흠	박노건	박영환	박치우	서승완	송병록	안진걸	유관영	윤종빈	이대영	이선신	이의영	이태진	장석림	정병순	정창수	조진만	최병오	최호영	홍미미
김진호	김현정	류도암	박노현	박용석	박태만	서영덕	송수영	안철원	유기선	윤중식	이덕희	이선태	이익모	이학수	장석춘	정병오	정창운	조진수	최병호	최호용	홍선표
김찬동	김현주	류동훈	박다진	박우룡	박태선	서환석	송용석	안현구	유기천	윤지성	이동석	이성계	이인영	이한길	장승진	정병훈	정태근	조진오	최봉문	최홍식	홍성균
김찬석	김현주	류명현	박두영	박우석	박태영	서용욱	송원기	안효정	유기청	윤지원	이동석	이성구	이일권	이한민	장심영	정삼룡	정태명	조춘수	최석준	최홍엽	홍성환
김찬호	김형규	류시문	박미나	박원규	박한웅	서우석	송은우	안희숙	유기현	윤진철	이동석	이성근	이재강	이한섭	장영식	정삼미	정태민	조태임	최성수	최희수	홍순엽
김창균	김형균	류지성	박미선	박윤수	박한호	서윤석	송인섭	안희정	유남식	윤한필	이동식	이성복	이재걸	이현미	장영오	정석희	정태성	조한희	최성실	최희수	홍순영
김창범	김형상	류종렬	박민준	박윤희	박행우	서은경	송인윤	안희철	유덕열	유효상	이동주	이성욱	이재림	이현석	장영환	정선혜	정태완	조형준	최성주	최희준	홍종학
김창식	김형조	류형욱	박병섭	박은아	박현진	서정일	송태교	양광희	유동진	은역수	이동준	이성원	이재욱	이현성	장옥숙	정선화	정태철	조희근	최성현	추동균	홍준표
김채운	김형준	류화근	박병오	박은준	박형근	서종대	송하동	양대규	유명진	음유정	이동준	이성재	이재완	이현숙	장용근	정성봉	정택수	주관수	최성훈	탁민	홍준현
김 천	김형진	마경화	박병욱	박은현	박형삼	서종철	신규철	양두석	유병상	이갑수	이동한	이소영	이재운	이현재	장원규	정성심	정학수	주상희	최수진	표규열	홍진구
김천중	김해경	마미영	박병일	박응순	박혜란	서직원	신근택	양부식	유병서	이강운	이동호	이승수	이재은	이형세	장유리	정세진	정한균	주용학	최승섭	하상준	홍창기
김 철	김해련	맹광영	박보성	박의웅	박호걸	서한송이	신동민	양연식	유 송	이건호	이동호	이수연	이재환	이형희	장유환	정세훈	정해석	주익철	최신애	허용호	황경복
김철주	김해숙	맹성렬	박상대	박이규	박호영	서한이랑	신동애	양원표	유인상	이경도	이만호	이수영	이정남	이호경	장은미	정승상	정혁제	주찬식	최영식	하태주	황기명
김철호	김해순	문경식	박상렬	박익중	박홍순	석기영	신동조	양윤숙	유인환	이경수	이명진	이순기	이정성	이호섭	장중철	정승준	정혜경	지동익	최영애	하현아	황선용
김철호	김 호	문광기	박상성	박인구	박후근	석철수	신동진	양인준	유일용	이경숙	이명천	이순배	이정영	이호욱	장철기	정승화	정혜승	지동현	최영철	한광덕	황선원
김철홍	김호경	문금희	박상혁	박인선	박 훈	선동수	신두철	양창우	유장연	이경우	이명훈	이승대	이정현	이화영	장형환	정연섭	정혜승	지정희	최옥현	한동운	황신영
김철환	김호균	문미란	박상희	박재갑	박휘영	선종국	신봉기	양혁승	유재민	이경준	이모세	이승섭	이정희	이화주	장해령	정연태	정화성	진석수	최은아	한상훈	황신준
김충환	김호성	문상준	박서희	박재완	박희령	설원식	신상진	엄미화	유재민	이경태	이미정	이승우	이정희	이 훈	장 훈	정영만	정효진	진영수	최원영	한석용	황영미
김차수	김호식	문석진	박서희	박재익	박희선	설창인	신승연	엄원중	유재욱	이경희	이민아	이신호	이정희	이훈섭	장희근	정영식	정희창	진유식	최원천	한선아	황유경
김태균	김호연	문세영	박성배	박정교	반철진	성광식	신영철	엄인수	유재중	이곤섭	이범재	이애화	이종건	이희중	전기호	정왕규	조강희	진정훈	최유영	한승구	황이남
김태균	김홍관	문소상	박성용	박정민	방민식	성금성	신영철	엄홍길	유재혁	이광섭	이병관	이연석	이종규	임건욱	전대홍	정용택	조건영	진종남	최윤재	한승호	황이숙
김태수	김홍권	문인섭	박성용	박정석	방상윤	성병화	신원기	여은희	유중성	이광용	이보실	이명란	이종길	임명호	전명석	정용화	조경민	차은상	최윤진	한승호	황인구
김태수	김홍규	문장협	박성정	박정식	방승범	성 신	신용규	여해경	유창선	이광필	이봉숙	이명림	이종범	임 삼	전병순	정운수	조광현	채두병	최은경	한연하	황인선
김태완	김호선	문지원	박성혁	박제화	방정혜	성원규	신은정	염규석	유평준	이광택	이봉훈	이명범	이종수	임서구	전병양	정원철	조광희	채민성	최은식	한영관	황진영
김태윤	김호원	문차호	박성훈	박종근	방종수	성윤숙	신정우	오다현	유해신	이광필	이삼열	이영욱	이종욱	임세은	전봉양	정원희	조규홍	채예정	최은진	한용석	황철진
김태진	김희규	문태현	박세권	박종석	배승철	소경섭	신철영	오동엽	유항임	이광현	이상룡	이영음	이종윤	임영환	전봉진	정윤영	조병익	채원호	최인숙	한용환	황호식
김태현	김희영	문현정	박세원	박종선	배영기	소진성	신현호	오상엽	유희숙	이규용	이상범	이영채	이종훈	임용기	전상룡	정윤희	조상호	채종현	최인호	한홍열	황호열
김태현	김희철	문 희	박세현	박종소	배영환	소현민	심순혁	오상윤	윤건수	이규용	이상선	이영현	이주아	임용섭	전상욱	정은영	조성태	채준하	최 일	함동균	
김태형	나권일	민남미	박수행	박종원	배유아	손건일	심종진	오세정	윤경숙	이규철	이상엽	이영호	이주하	임장원	전성철	정의곤	조성희	채홍석	최장원	함동균	(사)경실련도
김태호	나기천	민병욱	박순기	박주은	배인명	손무길	심혜정	오세호	윤기복	이균성	이상엽	이용만	이주형	임정규	전영진	정의정	조성희	천기용	최재용	함두호	시개혁신센터
김태호	나명희	민선옥	박솔아	박준수	배장수	손봉호	심후연	오소택	윤대현	이근식	이상우	이용배	이준영	임종필	전용배	정인호	조순열	천대웅	최정표	함형욱	
김태환	나병현	민희숙	박성배	박종영	배종석	손성일	안규창	오승훈	윤득구	이근태	이상윤	이용선	이지영	임창선	전용일	정일용	조연정	천민승	최종석	허남중	강순주
김태훈	나상민	박각영	박승상	박종철	백요한	손승태	안기정	오장환	윤상균	이근행	이상윤	이용승	이지영	임철빈	전우영	정재은	조영록	천병우	최종일	허병권	강준모
김태훈	남기원	박경서	박승욱	박지원	백은정	손우영	안병노	오제명	윤숙자	이근환	이상진	이용한	이지훈	임태영	전장호	정재진	조용기	천상렬	최종철	허 석	고일두
김평진	남상권	박경애	박승진	박지은	백정숙	손재운	안병억	오해승	윤영근	이금희	이상철	이운향	이진경	임희윤	정경수	정정래	조윤정	천송걸	최준용	허수범	곽 도
김하나	남영진	박경준	박양제	박지혜	백진현	손정아	안상용	우중복	윤영천	이기송	이상희	이원재	이진원	장경완	정권용	정재용	조은혜	최경순	최준혁	허원철	곽충삼
김학수	남원호	박계원	박영규	박지호	변동철	손종보	안세영	원대한	윤윤식	이기우	이석교	이원재	이창엽	장동민	정덕임	정종원	조일흠	최광현	최지한	허지영	권영진
김해성	남현주	박광현	박영규	박지호	변상해	손호중	안영훈	원동재	윤은선	이기용	이석규	이원희	이창호	장문호	정만중	정주연	조재연	최기환	최지현	허창환	권 일
김해숙	남호원	박교영	박영기	박지환	변재근	손희경	안완용	원동환	윤은주	이기중											



김경희	유영모	권수복	서관승	최평규		김석래	이호진	김삼기	박수정	윤강원
김광만	윤재용	김근식	성재상	최호창	대호관세사법인	김선연	장선애	김삼일	박순옥1	윤길정
김금옥	이동근	김동규	송용석	한광수	김강준	김선정	전규화	김상천	박순옥2	윤정미
김기성	이만희	김동환	신경화	한정훈	김상현	김재부	정석중	김선심	박용안	이강석
김대용	이명수	김민식	신영욱	한준구	김태룡	김재준	정세환	김성진	박인근	이경희
김덕기	이병준	김병조	신정웅	황대중	나태균	김정근	정의호	김수진	박준기	이광재
김도영	이순배	김삼수	신중성	황지연	박병식	김중남	정의훈	김숙정	박추홍	이길중
김동식	이양재	김성호	안춘훈		박승민	김진숙	정현석	김승한	박태원	이산학
김미경	이유미	김수동	위정희	(사)경제정	박인동	김진욱	조남환	김양곤	박희자	이상귀
김석기	이은재	김용수	윤영진	의연구소	서경수	김태희	조무현	김용운	반창오	이상미
김성수	이재문	김용현	윤태룡		신희권	김형경	조영미	김용재	방미자	이상용
김세용	이정식	김은수	이기자	강영철	심재원	노영성	진수환	김원용	배동주	이상천
김영	이제선	김장철	이승규	곽수근	유주상	류형춘	최규천	김의아	배수중	이성호
김재령	이주희	김재기	이우영	곽의영	윤상경	박운남	최복규	김잠이	백세정	이양식
김재익	이창수	김재원	이웅립	김동우	이대순	박인재	최송길	김정주	백순환	이장영
김정인	이현주	김정웅	이익현	김소연	이덕우	박종시	최순희	김정택	백승일	이장표
김정철	이희승	김정진	이장한	김지환	이명근	박지호	최승룡	김중태	서주중	이정택
김종길	임경수	김정현	이재선	김혁	이순기	반태연	최승준	김중현	손은희	이창섭
김형욱	임창규	김제천	이정호	노영록	이지연	배정순	최은송	김철관	손정식	이창훈
김호현	임형백	김주호	이정우	문인철	이진	서은주	최재현	김청집	손진일	이철용
나인수	장명진	김진영	이중수	박상안	이창수	송문길	한동준	김충근	송수영	이형로
노두승	전은호	김진환	이중인	박익범	이태호	송민석	홍진원	김판희	송오성	장길호
노용래	장성훈	김창석	이진만	백승호	장영	송재석	황상철	김필성	송정일	장남수
도선봉	정애리	김태환	이현희	백종호	장진영	신미영	황은남	김한기	신미경	장석주
류성룡	정인환	김학성	이화용	성호준	전종찬	신성진		김현호	신미애	전갑생
류중석	조은철	김형만	임명선	손창민	전대석	신승춘	거제경찰서	김호영	신영호	전기풍
민범기	조재형	김희주	임을출	송운학	정경수	심규만		김호일	신진영	정보건
박경남	최강림	노귀남	임홍승	여은미	조영관	심윤보	기산종합	나기석	신진홍	정석윤
박상위	최두호	당명숙	장인석	오미단	조현	심한섭	간설(주)	나양주	안미나	정지영
박성우	최명철	류현정	장형원	윤언철	추승우	양창훈	강경수	남기원	여정애	제문규
박영웅	최윤정	문행규	전미옥	이덕호		원경숙	강성배	남덕희	오성관	조병호
박인순	최정우	박금해	전영선	이승훈	강릉경찰서	윤도현	강영웅	남원식	오성주	조승재
박재호	하동익	박미라	정동욱	이혜란		윤성원	강정숙	남희정	오정림	조원배
박정윤	하상우	박영희	정명숙	임효창	한살림강릉생	윤영호	강정효	노석현	육근호	조하영
박천우		박용주	정명자	정길재	활협동조합	이광중	강지은	노재남	육두표	주채민
박희정	(사)경찰서	박은주	정승훈	정종준	강남일	이귀녀	강학도	노재천	육방호	진성우
배웅규	통일협회	박주승	정영규	천미림	고석태	이숙희	경명자	류금렬	육용석	진희재
서민호		박준우	정창현	표정호	구광범	이요한	고영주	문상필	육종석	최삼주
서순탁	강만성	박준형	조광환	하능식	권상동	이윤일	권민호	문철봉	우정숙	최선중
신행숙	강은석	배인교	조성아	홍창식	권오석	이정임	권형준	박광호	원순실	최생중
심재민	강희명	배종근	주석부	황은경	김남두	이제영	김경섭	박대기	원종태	최양오
양우현	고석주	백인용	차승주	황정호	김남영	이주석	김귀순	박동진	유차상	최운용
오세형	고유환	백학순	최교열		김동명	이지은	김귀호	박영옥	유천업	최윤숙
원민철	곽일환	변상호	최우진	시민권익센터	김봉래	이진아	김민수	박성호	유태영	최은정

최정환	김형환	이원희	구차환	남윤화	서이석	이복자	제창록	강신주	김현모	선종아
최창식	김홍규	이유형	권도형	노경임	석학주	이부순	조경봉	강오일	김현석	설상욱
추현철	김흥기	이인형	권순남	노병일	성인숙	이상봉	조광진	강은섭	김효성	소범환
한기수	도대환	이정윤	권익구	노용래	손선주	이성숙	조범상	강정미	나미영	손성만
한은진	도형수	이창안	권혁	노혜숙	송쌍옥	이성진	조상희	강훈열	나병철	송광운
한인숙	류창열	전용범	권혁이	노희준	송혜정	이송재	조아라	고은옥	노남수	송승중
한장용	마태근	전진대	김경태	류미숙	신귀분	이승봉	조양희	공수현	류석렬	송원식
허추구	문성현	정강주	김경화	류정희	신민선	이승희	조은하	곽상희	류이중	송윤주
허희경	박귀룡	정병열	김기영	마이인	신복인	이양희	조태섭	구희선	류중희	송태석
한정임	박봉찬	정병우	김남권	박경옥	신성은	이연숙	조해성	권정희	류한호	신재안
홍성태	박성준	정석호	김남현	박계량	신윤철	이영신	조흥식	권충화	마재필	신주환
황남훈	박인영	정연권	김남희	박광수	신은숙	이영희	주명식	기창선	모상근	심재훈
황철득	박인관	정진철	김다솔	박기은	신혜정	이원영	주태진	김경현	모현숙	안태욱
황정원	박종희	정형호	김동범	박미경	신혜진	이윤식	지미선	김광영	문정찬	양궁용
	박찬진	제갈음미	김봉화	박미영	심혜진	이재길	지연옥	김기봉	민문식	양명희
경주경찰서	박태광	조덕수	김상옥	박미정	안경애	이재춘	진장호	김기홍	박광복	양정규
	반종국	조봉래	김선호	박민관	안철환	이정숙	차성미	김길현	박남규	양진환
경주공무원회	방현주	조영화	김성자	박민영	양금석	이중석	최경화	김남기	박병기	오경례
휴먼뱅크(주)	배이용	지병구	김수진	박복임	양정현	이하나	최도애	김남수	박병일	오경서
강지명	배철용	최병철	김승복	박성배	양철원	이현우	최미영	김동준	박상용	오승훈
곽정섭	서흥기	최삼호	김애란	박성영	연소희	이혜수	최상철	김동현	박상원	오지혜
권기홍	손영태	최암	김연옥	박승원	오명희	이혜진	최철규	김미남	박성수	유현
권오현	손용락	최임석	김영근	박옥남	오민석	이호석	추규호	김병철	박수인	윤두중
김경대	신수철	최진건	김영미	박은경	우동훈	이호열	하숙례	김성석	박양우	윤봉란
김경호	심정보	최춘자	김용길	박재금	우병실	이효성	한금희	김성일	박옥란	윤봉영
김기석	안경복	최현익	김원선	박재철	원범재	임재욱	한윤선	김수영	박인철	윤상영
김기중	안철철	최홍배	김윤권	박재희	유수연	임진희	한창욱	김양지	박종렬	윤영수
김동명	양철영	하재훈	김윤옥	박정옥	유홍우	장영기	한홍기	김영규	박찬숙	윤원진
김만곤	엄권섭	한순희	김윤재	박종기	윤명숙	정지은	허기용	김영길	박창기	윤재철
김만규	오영석		김윤호	박종미	윤문선	전광섭	허정호	김영목	박창석	이경환
김부석	우종철	광명경찰서	김은진	박주한	윤승형	전중석	허종은	김영범	박철웅	이동민
김양선	우호식		김정	박준서	윤종미	정기선	허창순	김영환	배용태	이상재
김연옥	윤병길	강남	김정숙	박진기	윤진원	정병오	홍경미	김은영	백상일	이성각
김영식	윤정수	강성철	김종임	박춘선	윤창일	정상영	홍진호	김인수	백석	이성근
김영태	이관	강신재	김진경	박형근	윤철	정애숙	황동식	김일술	백영기	이성길
김영화	이규찬	강옥영	김진숙	박혜정	이강순	정원이	황인란	김일호	백익순	이승훈
김인수	이동호	강옥희	김현정	배권식	이기영	정인애	황재연	김재석	백중기	이연
김정제	이미경	강주례	김현정	변미애	이말복	정중환		김정훈	버스조합	이윤순
김중구	이상기	강찬호	김현희	변한주	이명숙	정지선	광주경찰서	김진길	변동철	이은방
김철년	이상수	강희규	김혜숙	서방자	이미선	정하준		김집중	봉형균	이인수
김철수	이상우	고완철	김혜정	서순자	이미희	정학균	(주)영암마트	김창현	서명규	이재석
김해숙	이성락	고재원	김호숙	서용원	이병렬	정혜경	(주)해양도	김철현	서민호	이재원
김현근	이성민	고정민	김희수	서유리	이병순	정혜선	시가스	김충식	서상기	이재윤
김형기	이성조	고형복	남기표	서은경	이병철	정희균	강대욱	김해룡	서해자	이정근



이정학	채육진	김재훈	오영재	최연호	유애순	남기후	허우섭	김창완	이상천	하순화	김태형	오상철	정현재	김미주	박광배	송미승	이춘엽	최인권	강승희	김남식	김순애
이창호	천재영	김종배	윤달근	표상욱	이경은	도현순	홍석만	김천일	이상필	하중호	김태호	오세운	정희대	김민성	박근영	송영종	이한경	최 일	강시명	김남일	김시현
이학균	천홍석	김종율	윤상훈	허 진	이광석	류문식	홍성도	김태우	이상화	한상우	김태훈	오원관	조성천	김민희	박금자	송진호	이현중	최재경	강예운	김대래	김쌍우
이형호	최영남	김준호	윤임식		이상운	문태식	황인문	남운환	이선혜	한상인	김현하	오중섭	조용석	김보현	박나영	송하철	이형오	최종영	강유창	김 도	김영관
이호진	최용석	김준희	윤종석	군산경실련	이상춘	박경자	황인순	남인철	이연재	홍희청	김형태	오학석	조윤제	김상원	박병철	송홍범	이홍성	최치영	강재현	김동영	김영길
임기춘	최주영	김진곤	이관순		이석진	박병돈		노영희	이장수	황광석	김혜천	우금옥	조철휘	김선미	박석일	송희진	이홍식	최현철	강재호	김동호	김영길
임동훈	최준영	김진억	이덕수	강왕근	이선덕	박영훈	대구경실련	류학곤	이재민	황귀선	김홍숙	원용철	조항범	김선실	박성권	신관용	임일용	최호길	강정규	김동환	김영옥
임영범	하성택	김진희	이명숙	고계근	이순애	백종일		맹일영	이중경		도남선	유병한	조혜형	김선홍	박성일	신우기	임종석	최홍림	강주하	김명석	김영주
임종철	하주아	김철광	이명희	고덕영	이유실	신명순	에스제이	문효상	이진태	대전경실련	명율식	유인규	진동규	김성철	박성진	신재범	장 미	최환석	강중목	김문규	김영호
임형채	한 샘	김현미	이미경	김영혜	이춘자	신순철	간설(주)	박병주	이진현		문경재	육종근	진동섭	김소미	박세훈	신주환	장은경	최 훈	강태문	김미향	김용섭
임형철	한신구	김휘연	이미숙	노치우	이희재	심상용	강연환	박병준	이진희	강태현	박경오	윤석원	차정민	김수경	박소영	심재경	장중국	하상복	강필원	김백철	김용원
장시영	허기석	김휴진	이병문	박은아	임구원	안재범	강호욱	박종철	이창용	고제열	박근영	윤여진	최경호	김승호	박송춘	안영하	전중국	한건준	강현주	김범준	김용필
장은진	허문수	김희덕	이상도	심규만	장순환	양영재	경희창	배기재	이태용	곽영교	박기남	윤주병	최경훈	김신규	박소옥	양명희	전철균	한상호	경규성	김병곤	김원태
장 익	허 탁	김희철	이상철	원유환	정경조	어중석	공영선	변부형	이해숙	구남혁	박성훈	윤태희	최몽문	김영삼	박송채	양승희	전철영	한승주	고명석	김병용	김유경
장진호	홍기태	나효훈	이수영	이지수	조용석	엄선덕	곽덕환	서정옥	이형태	권철명	박성진	이건희	최성구	김영태	박송옥	양영주	정남준	한승현	고인홍	김병하	김유리
전동환	황동현	노상진	이영애	임용선	조은정	오미애	곽성기	서종철	장영규	김건희	박용직	이계자	최장환	김영환	박영용	양진영	정영오	한대연	고재일	김복준	김유석
전용준	황윤용	라병희	이원재	최 응	조재용	오인순	권기억	성광기	장은숙	김기수	박종대	이광자	최정우	김예영	박용목	양판승	정병수	홍건숙	고정연	김봉국	김윤영
전창주	황인섭	류시건	이원희	홍관표	차숙희	오흥미	권기혁	성윤상	장호경	김기오	박종석	이광진	한경이	김용수	박인웅	어성준	정삼수	홍국선	공병승	김봉규	김은숙
정광우		박경삼	이정건	홍기원	최경용	유영록	권병훈	손광락	장호열	김대석	박준혁	이문지	한성림	김정민	박인철	오승주	정석우	홍근표	곽수현	김봉수	김인한
정두숙	구미경실련	박상우	이제수		최충식	윤명자	권윤집	손상흠	전상훈	김동선	박태호	이병승	한정화	김정아	박정석	오장택	정세빈	홍석준	곽원병	김부근	김인환
정보경		박성도	이중률	군포경실련	하은호	이금순	권휘동	손승원	전영평	김문교	박희조	이승용	한화교	김정용	박정희	오정수	정승임	홍순길	구경희	김분이	김장섭
정상문	강승수	박순이	이창형		한상수	이기형	김대식	송영식	전재호	김문영	방명덕	이영수	황의달	김중숙	박종두	오정준	정영대	홍진표	구명종	김상문	김재만
정석훈	강신웅	박응도	이태동	력키빌딩	호희국	이두열	김도영	신규상	정경선	김병국	배동국	이용훈		김종익	박종석	원오준	정원중		구주영	김상길	김재명
정영훈	고영호	박재욱	임은기	곽윤열	황윤경	이부형	김도한	신영섭	정문정	김상환	백미옥	이인세	목포경실련	김중호	박종철	유경생	정준택	부산경실련	구효송	김상배	김재일
정용완	구사근	박정구	임주석	국정아		이선주	김동석	심병철	정성운	김영기	백정웅	이재영		김창모	박주이	유광호	정진대		권명섭	김상욱	김재찬
정원태	권구일	박주영	장도익	김대욱	김포경실련	이재홍	김동일	안영석	정순천	김영주	서한형	이정구	강병국	김창세	박준형	윤경란	정평국	(주)경성에너지	권범현	김상호	김재훈
정은수	권 보	박주영	장문석	김동별		이정규	김명수	안정향	정은숙	김영희	서형호	이정호	강병조	김청하	박찬수	윤치술	정혜수	(주)부산관	권수범	김석준	김정각
정일용	권순서	박창재	장세광	김석현	(주)신원렌터카	이정수	김명혜	안화석	정창길	김 욱	서희경	이중범	강성태	김춘길	박창수	이난희	정호원	광호텔	권오성	김석준	김정량
정종현	권순형	박형진	장종길	김연승	주식회사 대한	이정수	김무중	양대환	정태완	김원희	성기석	이지영	강영태	김태중	박창윤	이덕일	조기석	(주)쓰리	권오혁	김석호	김정수
정진철	권윤택	박희중	장준우	김영희	진공엔지니어링	이종기	김문한	엄봉훈	조락현	김응배	손대근	이철은	강제석	김태현	박철수	이도홍	조미경	굿 정중석	권외분	김선년	김정숙
정찬용	김윤옥	배인호	장흥성	김종수	강명자	이종준	김민석	엄인용	조방희	김인철	송영환	이학재	강주천	김하성	박한호	이명희	조상국	(주)트리클레	권재현	김선미	김정순
정행섭	김경훈	백승국	전재돈	김창호	김남규	이중재	김상진	여은상	조인지	김재경	송인걸	이현대	곽경배	김하현	박해령	이문희	조순형	스앤에스	권태섭	김선희	김정택
정혜련	김덕중	변창우	전호갑	김희모	김두관	정일환	김석태	여택동	조정학	김재석	송재근	이현호	권인철	김홍석	박혁진	이범수	조영교	강경태	길태호	김성권	김정현
정환규	김도형	소평진	정석광	문성익	김문경	정희상	김선희	유성호	조찬호	김정기	신창호	이형복	김경옥	김희환	박현희	이병채	조영석	강규성	김가야	김성근	김종구
정환승	김동욱	송장호	정제봉	박영미	김미자	조승현	김수원	유영환	조창래	김종구	신현진	장복수	김경철	나지애	박혜영	이상권	조용호	강대영	김갑환	김성길	김종기
정환채	김동환	송철원	정진수	박정민	김영로	조용문	김영모	유왕근	진성학	김종기	신희권	장형근	김관옥	노경윤	박홍식	이성로	조인수	강미라	김경숙	김성수	김종민
조교영	김보준	신미정	정택균	박홍수	김영현	조용식	김용철	윤태우	차진근	김종천	신희영	장화식	김광배	명근홍	배근미	이영춘	조준범	강민석	김경일	김성열	김종우
조성식	김봉교	신주식	정택동	박희찬	김옥순	조종석	김윤호	윤현식	채오길	김종하	안광정	전영춘	김광창	모창용	배상기	이유리	천병식	강민수	김경조	김성춘	김종철
조승유	김봉훈	심재필	조경래	백교선	김종열	채신덕	김재범	윤홍식	최우국	김주홍	안남주	전혁구	김기권	문연철	배영철	이인수	천재관	강민정	김경택	김성태	김종한
조재곤	김연고	심정규	조윤경	석경수	김진희	최일환	김종웅	이노수	최원아	김진숙	안병진	정상희	김대근	문영덕	백재봉	이재광	천현중	강병석	김경화	김성호	김주영
주호연	김연환	안세찬	조현수	성시규	김창집	최재웅	김지현	이덕우	최종만	김진중	안영찬	정예성	김명숙	문 응	백정심	이재성	최경아	강삼옥	김광식	김성훈	김주현
지명순	김오나단	양남숙	지대근	심재숙	김철경	한성식	김진숙	이도현	최준호	김춘길	안재준	정우택	김명철	민경준	서미화	이정진	최병기	강상섭	김광희	김세한	김주호
지병근	김은희	양진오	최근애	안중호	김형창	한재혁	김진호	이미정	최환석	김충신	안중대	정인규	김명철	민정훈	서민재	이중화	최연식	강성권	김기진	김수미	김주희
지창환	김인순	엄상섭	최낙렬	오태화	나기천	한혜경	김창수	이병화	하경태	김태현	안중훈	정진숙	김문재	민천홍	손만호	이찬식	최완수	강성태	김길수	김수자	김준기



김준환	박길호	박철중	성영희	심운정	유재중	이성권	이훈전	정문수	조용규	최수미
김진영	박남희	박철한	손병열	심인섭	유정동	이성렬	이희길	정미경	조용언	최수영
김진찬	박도영	박태주	손봉주	심재천	유제현	이성림	임무진	정미영	조용우	최승환
김진필	박동범	박한규	손상용	심형철	윤강훈	이성열	임용관	정미한	조용한	최영주
김진현	박동석	박현욱	손순용	아영아	윤나영	이성훈	임우택	정민재	조용현	최용훈
김철도	박두춘	박해정	손영일	안기영	윤남열	이성희	임종수	정상문	조유장	최원석
김춘덕	박명식	박홍재	손정현	안도호	윤상미	이세형	임 호	정순영	조윤득	최은석
김태경	박미순	박희정	손정환	안명석	윤석준	이순정	장경식	정순일	조윤제	최은주
김태구	박미영	방성애	손창욱	안문상	윤성미	이승호	장귀봉	정신모	조윤환	최인한
김태우	박민규	방옥자	손치훈	안성관	윤수성	이시화	장규환	정애니	조은아	최재명
김태희	박민우	배광호	송문숙	안형하	윤재성	이영갑	장금구	정영점	조재형	최재호
김해동	박복용	배덕광	송순임	안재민	윤재철	이영신	장동범	정용성	조지혜	최정목
김현욱	박봉수	배성훈	송원섭	안종일	윤정선	이영호	장문숙	정용수	조지희	최종해
김현재	박상영	배용준	송은주	양동렬	이갑준	이영호	장문정	정우루	조철현	최철원
김형권	박상병	배유한	송재광	양시경	이강진	이영훈	장봉주	정은선	조현수	최혜경
김형균	박상조	배종출	송재은	양재화	이경숙	이옥형	장성호	정은주	조홍규	최희원
김형수	박석원	배해래	송정숙	양종철	이경학	이위덕	장세규	정재동	홍은데이	탁영민
김형천	박선아	배화숙	송종두	양종필	이귀선	이은화	장영철	정재호	좌정훈	하경민
김형철	박성수	백대영	송희준	양지현	이귀순	이을찬	장윤석	정종학	주수현	하나연
김혜경	박성철	백혜량	신경근	엄세원	이규현	이재정	장은선	정종화	주안나	하상철
김혜경	박성호	변영호	신군재	엄호천	이남걸	이정민	장재구	정지원	주재민	하소영
김혜연	박성훈	부두봉	신대량	오병루	이남기	이정식	장준흠	정진교	지경아	하순금
김호범	박승갑	서경국	신동욱	오상준	이남중	이정주	장지태	정창성	지은아	하정수
김홍재	박승제	서명대	신만석	오상환	이덕식	이정향	장해욱	정창화	진성표	하주수
김홍휘	박시우	서명립	신병훈	오세룡	이도준	이정호	장희정	정춘희	진수진	한기성
김훈태	박연수	서무건	신상구	오연석	이동률	이정환	전명숙	정치금	차동박	한미영
남경태	박영봉	서봉원	신상해	오영자	이동원	이정훈	전보익	정래영	차동욱	한병무
남기찬	박용주	서수금	신성진	오철조	이동윤	이조경	전세표	정하윤	차진구	한병철
남영현	박용한	서양수	신수진	오태석	이동진	이종립	전연숙	정한성	채중현	한성국
노경조	박윤기	서종석	신승균	옥성애	이동훈	이종원	전용배	정해균	천상수	한성안
노상훈	박재본	서창근	신영호	옥진우	이동희	이종철	전일수	정해명	천용욱	한영수
노영욱	박재우	서현수	신용현	왕 인	이만수	이종학	전정표	정환중	천정호	한재철
노일용	박재욱	서현식	신유천	우도균	이명식	이종화	전정호	제희문	최거훈	허진욱
도한영	박재현	석승희	신임균	우영자	이명진	이주환	전진영	조경태	최경윤	허해녕
류강렬	박재홍	석진열	신정희	우성철	이미경	이준승	전현수	조래영	최규덕	허현도
류위훈	박정숙	석태호	신철성	우정용	이병호	이진수	전호열	조명래	최남연	현지훈
류종성	박종덕	선석렬	신총기	원상순	이상구	이창희	정권영	조명제	최달용	홍봉선
류진호	박종석	설광석	신해경	원 허	이상미	이창재	정 근	조문선	최민식	홍일표
모상선	박준수	설동경	신항남	원희연	이상백	이춘구	정기섭	조봉수	최병근	홍종인
문명순	박준순	설호석	신현무	유상일	이상은	이춘성	정달식	조상희	최병찬	황국자
문재천	박준홍	성덕주	신해숙	유수윤	이상진	이학봉	정도영	조성렬	최보규	황보승희
민현선	박진성	성민수	심미예	유영명	이상득	이현제	정동만	조실제	최부환	황영식
박경주	박찬일	성병창	심상조	유완식	이석주	이현주	정동영	조양래	최선아	황인구
박관수	박철완	성영미	심성구	유재엽	이선희	이혜영	정영길	조영규	최성관	

속초경찰서	김상기	김형기	송종철	윤재희	장성원	최형덕	김동석	나민수	송기진	이운창
(주)강원으로	김선일	김호준	신대섭	윤정은	장은선	최혜경	김동선	나태성	송원찬	이원욱
통일자동차	김성권	남상진	신선익	윤 준	장재환	최효섭	김동원	남기석	신동섭	이원재
공업사	김성근	노금희	신영근	이건옥	장주열	추종권	김말순	남상덕	신복용	이윤희
평화산업	김성욱	노철호	신재민	이경호	전이령	탁동철	김미옥	남창현	신한미	이의봉
강동우	김수정	라을일	신창승	이경상	정병호	고성관	김미자	남택진	심재광	이재교
강미심	김순복	문재용	신창현	이기원	정성근	하성란	김미정	노선희	심현자	이재득
강석태	김순봉	민현정	신현식	이대복	정순희	한살림	김민수	명홍진	안혜영	이재우
강신길	김승철	박경미	신홍사	이돈섭	정양언	한상민	김민혁	문순심	양재철	이정하
강영희	김시형	박경심	심연흠	이동균	정용주	한성희	김백규	문승현	양진하	이종령
고석철	김영석	박계화	심윤자	이문성	정원모	한정숙	김석규	박귀례	예인기	이종주
고선창	김영식	박근철	안경민	이미경	정윤희	함국기	김석진	박동선	오세환	이주연
고영진	김영호	박덕희	안경수	이병선	정은솔	함준식	김성란	박민철	오완석	이주현
고인선	김영화	박명종	안경자	이봉진	정은희	허우리	김성연	박승원	오일용	이진성
고종문	김원기	박문수	안세준	이상식	정진수	홍명관	김시영	박영양	오지현	이찬용
고현주	김원일	박병훈	안종석	이상정	정진용	홍인숙	김안식	박원호	오해경	이창모
공정관	김우경	박성진	안종원	이상호	정호원	홍진희	김영기	박윤환	우양미	이창진
곽병용	김은중	박성한	양언석	이수영	정홍기	홍천동	김영래	박은호	유병욱	이판수
곽중환	김은희	박수경	양영희	이승재	조광덕	황보해용	김영수	박정화	유상철	이필근
곽현욱	김인섭	박승민	양진욱	이언우	조명수	황시영	김영태	박제현	유재성	이필훈
권중식	김일환	박영덕	양해준	이영선	조선휘	황영희	김원동	박주영	유제상	이해균
길 목	김재학	박영미	어주하	이영순	조성열	황은숙	김용로	박준배	윤귀현	이현순
김 철	김정식	박영희	엄경선	이우영	조성진		김용철	박진순	윤남권	이효주
김 철	김정아	박웅기	엄찬수	이운연	조현국	수원경찰서	김 응	박태경	윤두천	이희수
김강석	김정인	박정민	엄태영	이재선	주영래		김인석	박현웅	윤희경	이희숙
김경석	김정훈	박종학	오관영	이재정	진형배	(주)청영건설	김재기	박형순	이경섭	임해경
김경순	김종윤	박종현	오광택	이재홍	천성미	강민철	김재성	박화진	이국희	장래인
김경아	김주란	박종훈	오모현	이정하	천성필	강연희	김정희	박홍덕	이근호	장명욱
김계남	김주철	박희식	오승택	이종섭	최근석	강유정	김종석	방종복	이금희	장점오
김기석	김준섭	방대식	오윤택	이종식	최길순	강인선	김종선	배금란	이기홍	장진욱
김기준	김지혜	변성수	오홍철	이종식	최도환	강희정	김종오	배창수	이명욱	장현주
김남춘	김진태	변인미	원선목	이종길	최동권	강희진	김준혁	백해련	이문근	전희락
김덕용	김진태	서관우	원은주	이진여	최서호	고병익	김지란	변수정	이민구	정계화
김동수	김진희	서영기	유성봉	이진형	최승명	공민지	김진순	변영선	이병로	정민자
김동순	김진희	서은진	유영민	이 철	최애리	구본숙	김진한	서경희	이상명	정성균
김말순	김천수	석명환	유영창	이필순	최영미	구자돈	김철환	서상범	이상해	정순혜
김명섭	김철수	소문섭	유종완	이호석	최용석	권윤희	김종관	서수정	이성호	정양훈
김문석	김철환	손병섭	유주희	임덕수	최유정	권후남	김해영	서정근	이성희	정원제
김미경	김춘삼	손재복	윤광훈	임정길	최중현	김경수	김현구	서 환	이수행	정지홍
김미녀	김충남	송경희	윤규식	임종희	최지문	김경호	김현태	서홍석	이승호	정태정
김미정	김태균	송명근	윤기순	장경민	최진철	김대성	김혜련	성현구	이영민	정희석
김병욱	김태영	송은희	윤신남	장근호	최춘파	김도형	김혜숙	손형주	이영주	조경두
김부석	김형길	송제철	윤재훈	장영석	최택수	김동규	김희용	송금옥	이용호	조규만



황인동	김근수	김응철	박성인	엄연주	이용우	정석환	최정자	김윤애	채규현	고성봉
황인재	김기범	김의자	박수영	엄용수	이은정	정선오	최정철	김정길	최문희	고승한
황현숙	김기한	김인수	박옥희	여승철	이의재	정승권	최준혁	김정호	최종렬	고영미
	김남돈	김재경	박용해	여정주	이일희	정승연	최찬용	김종원	최진희	고영빈
인천경찰련	김대중	김재식	박정훈	오경환	이재필	정연중	최 현	김주희	허덕철	고영수
	김덕중	김재영	박준용	오병집	이재학	정원경	최화영	김진성	한재덕	고영식
(주)진영이엔	김동완	김종길	박진석	오원선	이재훈	정은식	최효숙	김판용	황병해	고재우
지-최춘옥	김동우	김종욱	박찬대	우수홍	이정림	정재영	한기남	김혁수	황선주	고재일
(주)한성라인	김동호	김종호	박태선	유동현	이정윤	정재윤	한대수	노병문		고정윤
(주)다큐엑스	김두영	김종화	박한정	유정은	이종일	정지은	한두현	박규만	정음경찰련	고정훈
인천북합운	김명석	김준우	박현호	유진성	이주영	정진수	한만송	박영수		고태식
송협회	김명제	김지혜	방수환	유찬민	이주희	정진오	한창현	박영진	고남용	고행곤
사단법인무지개	김미아	김진영	방정환	유홍성	이준한	정창훈	함지현	박양림	김응철	기태선
도영운수(주)	김미현	김진희	배승휘	윤관욱	이종량	정태원	함창학	박효민	김택술	김강문
강대준	김병우	김창문	배철현	윤대기	이진준	정항진	허도병	송악용	김 현	김경용
강덕우	김병철	김칭우	백동수	윤동구	이찬우	정훈교	허선규	심동희	박래수	김관식
강명선	김봉수	김태호	백민섭	윤명철	이창숙	정희윤	허수범	안수현	박영민	김광섭
강명수	김상길	김태훈	변성준	윤미경	이창훈	조광희	허우범	안영미	송민수	김기훈
강상곤	김상섭	김하운	서경욱	윤지의	이철준	조난주	허창희	안정훈	유사현	김남혁
강 석	김상열	김현식	서부길	윤 호	이한용	조동암	홍옥표	엄상섭	이상길	김대호
강석철	김상우	나영우	서용성	윤희택	이행숙	조용철	홍유나	오상현	이성실	김동욱
강선욱	김선홍	나종필	서주선	이강훈	이현경	조용화	홍인성	유창엽	이원직	김동진
강옥엽	김 설	나종훈	서태원	이귀복	이형구	조자영	홍인식	윤철웅	임영관	김동훈
강정호	김성근	남세종	서해동	이기원	이형수	조현준	황석광	윤태영		김명준
강태경	김성수	남종희	서해안	이기태	이희광	조희선	황수연	은영주	제주경찰련	김봉석
고덕봉	김세훈	남지승	석 일	이길성	이희숙	주영선	황용선	은용우		김봉철
고재성	김수만	남창섭	성기건	이다빈	임강민	지영일	황제우	이기화	강경희	김봉희
고정규	김승남	남홍우	성덕규	이덕환	임승관	진혁화		이민호	강금중	김부찬
구자길	김승희	노국진	손장원	이도희	임채훈	차광윤	전주경찰련	이서경	강민정	김상우
권경자	김연옥	노승환	송경희	이동기	임현준	차득기		이승현	강봉석	김 석
권남구	김연중	도지성	송문성	이동현	임희숙	최경훈	강원균	이 정	강인창	김석범
권대현	김영구	류권홍	송원덕	이루다	장영현	최광용	강호수	이현희	강지용	김성수
권미정	김영국	류병희	송인선	이린우	장일진	최광은	곽이구	임명진	강창균	김성준
권오경	김영수	류재홍	송창섭	이문의	장정민	최금행	곽홍규	임성진	강창식	김세검
권용희	김영준	명선목	송한철	이범열	전동춘	최두영	김관성	전기환	강태운	김수남
권정호	김옥산	문상범	신나영	이병철	전영우	최병길	김대기	정구영	고광희	김수연
김갑봉	김용미	민근홍	신영은	이상동	전용성	최병윤	김만식	정세윤	고권만	김승필
김경원	김용민	민동식	신은철	이상영	전우진	최상희	김병석	정연택	고내수	김승훈
김경태	김우경	민태운	신종화	이상진	전준권	최서희	김삼덕	정인호	고동철	김양보
김계원	김원화	박기욱	심성순	이상훈	정규식	최성원	김세민	정태원	고명호	김영희
김관호	김윤태	박상필	안동찬	이성한	정기호	최수진	김수환	조선환	고보선	김용범
김광업	김은경	박상희	안병준	이수명	정낙식	최순자	김여진	조찬완	고봉석	김원규
김광호	김은영	박석민	안희섭	이애경	정두용	최윤지	김용권	지은숙	고봉수	김원삼
김균률	김은희	박성은	양희석	이연숙	정미경	최인용	김용휘	진정현	고성봉	김익태

김인영	정상철	박지영	김경은	유병국	최석림	강은희	김명배	김용덕	김태완	명정희
김정수	정선태	박해진	김기태	유진영	최신수	강진성	김명수	김용석	김태인	문성오
김지연	조남섭	서정열	김길년	윤건호	최창환	강현구	김명자	김용승	김태형	민경익
김창기	조문수	서정호	김동욱	윤권중	하중률	강호문	김문옥	김용규	김태희	민경자
김창순	조시중	송태중	김미경	윤미숙	한광수	강호승	김미라	김유미	김필제	민승기
김창연	좌광일	예규현	김미경	윤일규	한문식	경준용	김미숙	김유호	김학민	민준형
김철수	한남석	오순덕	김미수	윤정섭	허 영	고금순	김미숙	김윤모	김학실	민창식
김형진	한영조	오희석	김민수	이경숙	허중일	고영구	김미희	김은옥	김현상	박공규
박만용	한용환	윤선한	김봉미	이경주	황중현	고영재	김민호	김응일	김현숙	박관주
박석연	한재철	윤종도	김상관	이명근	황천순	곽규은	김백규	김인숙	김현숙	박구원
박승훈	한정훈	이민우	김세곤	이병덕		곽승호	김병우	김일경	김현주	박근수
박시환	한철호	이성호	김용진	이상일	청주경찰련	곽창록	김병의	김일수	김형근	박근수
박오범	현경수	이영길	김종문	이상춘		구남휘	김병철	김재복	김형창	박기번
박정용	현경호	이영희	김진태	이서영	(주)대현프리	구안서	김봉술	김재연	김호일	박기환
박종규	현영철	이이형	김철수	이선열	물창주지사	권기승	김봉주	김재원	김홍구	박남순
변성언	현용택	이재관	김태명	이수현	(주)명성엔	권미경	김상무	김재중	김홍성	박동구
변정철	현중철	이재철	김형조	이승열	지니어링	권성안	김상수	김재학	김환국	박명규
부상원	현창석	이지영	김혜영	이인범	(주)세일	권수복	김선희	김재형	김황래	박미영
부윤삼	홍성화	이흥기	김홍원	이종욱	공공디자인이즘	권영기	김성수	김정문	김희수	박민순
송대영	홍순민	임태진	김홍철	이종필	네모토 마	권오건	김성천	김정미	김희식	박범혁
송석언	홍용의	장석윤	나이란	이철호	사프구	권태성	김송일	김정승	김희정	박석현
안영철		정윤태	남명희	장기수	대신정기화물	권혁상	김수열	김정웅	나동현	박선현
양문석	창원경찰련	제재영	노덕우	장명수	자동차(주)	김갑용	김속자	김정일	나채경	박성호
양문중		조양래	노순식	장원철	대전건설(주)	김강일	김소영	김정초	남대우	박세웅
양봉석	강권식	주성주	류임상	정재식	두꺼비마을신문	김건도	김순천	김정태	남성욱	박연수
양성국	강동석	최원배	류지현	전종한	리드산업	김경자	김승효	김종구	남성욱	박영미
양시경	강수근	최재형	맹창호	정미영	개발(주)	김경호	김안식	김종기	남종순	박영순
양우선	강태욱	최정현	명진아	정미주	범우법인 주성	김계욱	김양식	김종철	노근호	박용석
양진웅	권대용	최팔호	박민숙	정병인	서울고속(주)	김광남	김연식	김종태	노영민	박용연
오승용	권재길	하영기	박순환	정운양	신일전기	김광렬	김영근	김주복	노재량	박익규
오영익	김성욱	허효창	박종갑	정운세	공업(주)	김광복	김영란	김주환	도선봉	박인규
오영환	김정한		박종례	정재교	씨투넷(주)	김광수	김영미	김준경	류규식	박인숙
오정훈	김중삼	천안아산경찰련	박종복	정치화	에듀크리안트	김광직	김영민	김준기	류근모	박인자
오창현	김중운		박태서	정하진	청주생활용품유	김광희	김영배	김준년	류근윤	박재경
유덕현	김진철	강민숙	박현희	조강석	통사업협동조합	김교선	김영옥	김준수	류덕환	박재관
유두석	김치득	강인영	방재환	조영주	청주성안길상	김규설	김영재	김준태	류연옥	박재익
윤영부	김치영	강태운	송용완	조인순	점가상인회	김규원	김영진	김진철	류우열	박종관
윤영환	김형석	강필호	신동현	조하심	강대성	김대중	김영태	김진호	류재형	박종룡
이숙희	나선애	강희두	양승조	조호익	강 민	김동암	김영호	김창한	류재호	박종률
이용민	나태연	고병현	오관식	주홍중	강민오	김동욱	김영환	김천식	류진호	박종서
이정민	남정호	고영술	오수균	차준희	강석형	김동일	김영환	김 철	류학천	박종선
이태운	도춘석	구분영	오승화	최경식	강성래	김동진	김영희	김춘희	류현숙	박종순
임숙자	문지영	구자형	오인철	최경영	강승범	김두호	김용국	김태봉	맹석주	박종천
장원석	박기문	금명기	우승윤	최석남	강영미	김말숙	김용덕	김태성	맹현숙	박종태

박종혁	성주우	안병대	유인봉	이명훈	이재덕	임동현	정상신	조장식	한수환	김용재
박종희	성원용	안성호	유일수	이미경	이재영	임병락	정상옥	조항진	한은례	김정현
박주호	손세원	안영숙	유재일	이미화	이재영	임성진	정상완	조형규	한익돈	김종식
박진우	손윤희	안장현	유주하	이민영	이재원	임성춘	정상용	조혜경	한인섭	김평안
박찬병	손정훈	안재홍	유채연	이범구	이재은	임용수	정성희	주서택	한정현	김한택
박철규	손훈진	안창만	유철호	이범석	이재춘	임용현	정세웅	주성규	한진석	김해경
박철석	손희준	안치석	유행렬	이병관	이장규	임은정	정승희	주재규	허석렬	김희성
박춘섭	송만호	양계인	유현덕	이병권	이정석	임의순	정연숙	주재현	허성만	남형우
박해덕	송봉화	양기정	유현철	이병호	이정수	임일수	정영래	지동규	허 영	박경철
박행자	송선호	양기춘	육미선	이복순	이종섭	임재경	정영섭	지 민	허장권	박대진
박호표	송영준	양미선	육종길	이상규	이종섭	임재규	정영희	지상오	현상주	박도수
박희분	송의천	양찬섭	윤건영	이상복	이종수	임재일	정우영	지의경	현 진	박미현
반영운	송일근	양철호	윤관수	이상식	이종실	임종승	정은희	지현성	형미희	박상규
반주현	송재경	엄경출	윤기용	이상중	이종윤	임지은	정인수	진경수	홍강희	박상렬
배관희	송찬주	연광석	윤명숙	이상준	이종한	임차남	정일기	채명순	홍경선	박정근
배병기	송태성	연규용	윤병희	이석희	이주봉	임한빈	정일택	채희관	홍명근	박형일
배상은	송필수	연방희	윤상이	이선순	이주선	임한수	정재량	최각규	홍석원	방명열
배응환	송해근	연영규	윤서영	이선우	이주형	임한경	정정필	최경호	홍성학	방수미
배중서	신경운	연영태	윤석위	이성민	이준수	임혜숙	정지성	최계원	홍성학	배은숙
백선행	신국희	연철흠	윤승현	이수복	이중섭	장경석	정 진	최광민	홍승표	변용환
백승협	신규식	연호석	윤정수	이수영	이중원	장남운	정진아	최대철	홍우표	변좌용
변광섭	신동선	염봉순	윤정숙	이수한	이중현	장동대	정진원	최명섭	홍응표	석영기
변길주	신명섭	오국진	윤찬열	이순남	이중훈	장병순	정진하	최상영	황경수	손현기
변민수	신명수	오명진	윤태한	이순철	이지영	장병희	정 철	최상희	황규혁	손흥주
변상태	신형자	오석송	윤한식	이순호	이철중	장선배	정홍선	최성희	황동훈	송창근
변상호	신범식	오연경	윤해정	이승배	이철희	장영건	정해영	최승민	황락훈	신길호
변성민	신성일	오영미	윤호영	이승준	이한훈	장재봉	정현순	최영중	황선건	신선철
변은영	신승수	오영애	이경순	이승철	이해승	장호진	정희승	최우식	황성주	신혜숙
변의수	신승주	오영필	이경희	이애자	이항미	장홍원	조경주	최운침	황영미	안봉진
변장섭	신승진	오창민	이광용	이양우	이현수	전광호	조국현	최윤정	황희연	안호춘
봉원진	신명규	오태진	이광희	이연옥	이현수	전년규	조규호	최은실		양태식
부찬희	신명희	우상동	이귀형	이영숙	이현식	전병선	조동순	최진옥	춘천경실련	오동환
서길용	신욱희	우장명	이규선	이영진	이현주	전세식	조상현	최진완		윤성중
서대석	신용재	우정순	이규호	이영희	이형각	전용필	조성구	최충진	춘천상공회의소	윤준형
서완석	신철영	원광희	이근식	이예린	이형우	전용표	조성오	최태호	고태규	유영호
서용원	신철호	유광식	이기만	이옥규	이형찬	전우석	조수중	최현숙	관용범	유재원
서우석	신태경	유근수	이기정	이옥인	이형택	전창해	조승연	최형도	김정숙	윤장혁
서준철	신희희	유민상	이동로	이윤범	이화련	전희택	조완영	최호균	김광배	윤재경
서효석	신희식	유선우	이두영	이은희	이호숙	정교순	조용숙	표한홍	김남철	윤재선
석명용	신희숙	유성훈	이만형	이인규	임건철	정 균	조운기	풍경섭	김대영	윤학로
석 준	심규석	유순영	이명원	이인우	임규찬	정란희	조윤행	하옥란	김병철	이경옥
선종필	심상학	유영경	이명관	이일만	임근수	정미화	조은애	하재성	김석중	이관행
설경철	심수영	유영숙	이명순	이일우	임기수	정병숙	조율선	한기억	김선배	이복연
성기남	심영미	유영아	이명호	이정희	임기중	정상섭	조이현	한상화	김승현	이상섭

이상철	전운성	황덕호	권태훈	김원우	김현실	박정환	유성찬	이우년	장현정	최병문
이석원	전호성	황혜숙	권택석	김은정	김현철	박준규	유재준	이욱재	전극중	최윤정
이승준	정의성		김기호	김익태	김효성	박태승	이경식	이운용	전정렬	최재봉
이원규	정지만	포항경실련	김대열	김인랑	나기합	방성호	이규은	이원탁	전해란	최정식
이은영	정종교		김대영	김장수	나창호	서동욱	이동철	이익창	정승태	최태열
이인배	조성모	포항재활의	김동완	김재석	남승국	서윤기	이동학	이재학	정은미	최희수
이인섭	조성자	학병원	김무영	김정수	도승표	손종수	이동훈	이정미	정태문	편도선
이종민	진장철	화일산기(주)	김문규	김정혜	문기영	손준호	이미나	이정훈	정혜영	하승환
임재선	최영진	강용호	김미경	김준태	박광열	안창한	이미아	이지은	정 휘	한상복
전규호	최희수	강창성	김보람	김진두	박근영	안혜정	이상구	임미진	정희철	허태구
전근우	하성준	공영서	김봉만	김진순	박문태	양기정	이상민	임영숙	조동욱	홍승철
전동준	한광수	구자욱	김상수	김태석	박상조	오호창	이상윤	장병화	조은경	박익룡
전만식	한희민	권부혁	김성예	김태진	박인호	우홍인	이수열	장성숙	지승익	황보경운
전성휘	함태성	권영준	김수구	김태현	박 일	원호연	이수창	장태윤	진기은	황보원주
전양호	함형주	권오일	김용갑	김태희	박재열	유대철	이시우	장현수	최동수	황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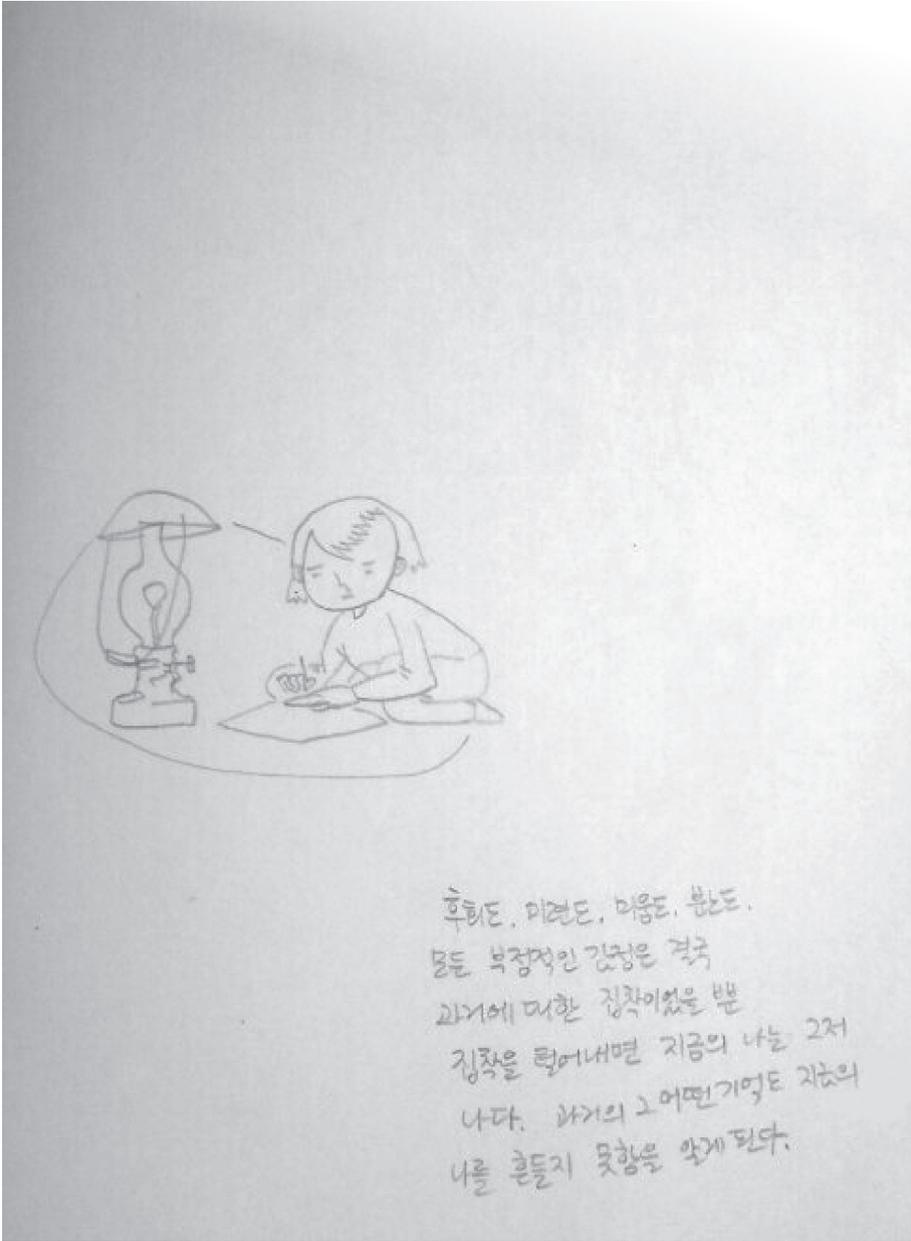
### 중앙경실련

<b>사무총장</b>	766-5626	고계현		<b>(사)경제정의연구소</b>	766-5625	팀장: 권오인
<b>기획·총무팀</b>	741-8566	팀장: 김한기, 부장: 채준하, 간사: 오세형		<b>(사)경실련통일협회</b>	766-5624	팀장: 김삼수
<b>회원·홍보팀</b>	744-0400	팀장: 김한기		<b>(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b>	766-5627	팀장: 윤철한
<b>경제정책팀</b>	3673-2141	팀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b>시민권익센터</b>	3673-2146	간사: 권태환
<b>정치사법팀</b>	3673-2145	팀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정유림		<b>소비자정의센터</b>	765-9732	간사: 박지호
<b>사회정책팀</b>	3673-2142	팀장: 남은경, 간사: 김용석		<b>월간 경실련</b>	766-5629	이사: 음유정, 김용재
<b>국제팀</b>	766-5623	간사: 이현아, 이수련				
<b>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b>	766-9736	팀장: 윤철한, 부장: 최승섭, 간사: 윤은주				

### 지역경실련

<b>지역경실련협의회</b>	031-253-2266		<b>충청권</b>		
<b>광역시</b>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부장: 신명자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b>경상권</b>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이현호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상식, 간사: 박희자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강미라, 배성훈, 간사: 정애니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이지영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선희, 팀장: 김성아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방현주
<b>경기·강원권</b>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협	031-253-2265		포항경실련	054-273-0185	간사: 장현정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간사: 최미영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b>전라·제주권</b>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영, 간사: 유병욱, 정재욱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최윤정	여수경실련	061-643-2110	집행위원장: 김 신, 수습간사: 정은숙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인순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상운, 간사: 변정혜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최기자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한섭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통우
양평경실련	070-8362-2147	국장: 최갑주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정책위원장: 이점수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팀장: 이경옥, 간사: 오연옥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최광일

빨때추니... 흥가분한 시작을 위한 준비..



후회든, 미련든, 미움든, 분노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과거에 미한 짐작이 있을 뿐  
짐작을 털어내면 지금의 나는 그저  
나다. 과거의 그 어떤 기억도 지금의  
나를 흔들지 못함을 알게 된다.